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7~1998

인쇄/1997년 12월 27일
발행/1997년 12월 30일

발행처/민족통일연구원
발행인/정세현
편집인/통일정책연구실

등록/제2-2361호(97.4.23)
(142-076)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대표)900-4300 (직통)901-2523 팩시밀리 901-2544

© 민족통일연구원, 1997

민족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한국경제서적 : 737-7498

ISBN 89-87509-25-7 5,000원

연례정세보고서 97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7~1998

민족통일연구원

서 문

1997년 동북아 안보정세는 한반도 통일환경에 이중적으로 작용하였다. 제네바에서 4자회담이 개최될 수 있었던 점이나 북한 신포지구내 경수로 건설사업이 한국주도로 추진될 수 있었던 점은 긍정적인 진전이다. 아울러 역내국가들이 대내 경제발전을 위해 지역질서의 안정과 평화를 추구하였는데,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그러나 동북아 신질서 구축과정에서 미, 일, 중, 러 4대국간에 나타나고 있는 이해대립, 특히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에서 미·중간에 전개되고 있는 영향력 확대 경쟁은 한반도문제의 국제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1997년 북한정치의 가장 큰 사건은 10월 8일 김정일을 당총비서로 추대한 것이다. 김정일이 당총비서에 추대됨으로써 이제 북한은 최고사령관이 통치하는 변칙적인 통치행태를 종결짓고 정상적 체제로 환원된 것이다.

그렇지만 경제회복, 식량난 개선, 장기 인민경제계획 수립 등에서는 여전히 부진했다. 1997년 북한경제는 전반적으로 1996년도 수준 이하로 쇠퇴하고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비공식부문 경제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북한당국은 체제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비공식부문 경제의 확산을 묵인하고 농업부문과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부분적인 정책변화를 시도하였다.

사상적 통제와 국가보위부 및 사회안전부 등 국가기구에 의한 물리적 사회통제와 함께 1997년에는 보상체제를 활용한 사회적 통제가 강화되었다. 그러나 식량난으로 인한 배급체제의 와해는 기본적인 사회

통제 체제를 약화시키고 있다. 중국과의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북한이탈 주민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남한으로 귀순하는 북한주민의 수도 증가하였다.

1997년 북한은 대남적대 및 남한배제전략을 지속하였다. 대신에 1997년 북한과 미국은 「기본합의문」 이행의 틀 속에서 준고위급회담, 미사일협상, 미군유해 송환 협상, 경수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4자회담 개최를 위한 협의를 진행시킴으로써 양국관계를 일보 진전시켰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1997년에도 북한이 기존의 대남 반정부투쟁을 지속함으로써, 남북한간에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대결과 긴장이 계속되었다. 북한은 남한과의 당국간 대화를 지속적으로 거부했는 바, 이는 체제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남한과의 대화가 체제유지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과 한반도문제를 대미협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북한의 의도 때문에 1997년에도 남북 당국간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비당국간에는 적십자회담 개최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

남한의 경제난으로 인하여 남북한 관계가 과거 어느 때보다 불투명한 상황에서 민족통일연구원에서는 1997년의 동북아 통일환경, 북한정세, 남북한관계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1998년의 정세변화를 전망하였다. 본 보고서가 통일문제 관련기관과 각계 전문가들을 위해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1997년 12월
민족통일연구원
원 장 丁 世 鉉

요 약

요 약

1. 통일환경

1998년 동북아에서는 미국을 정점으로 하여 4대 강국이 정립하는 형국이 지속될 것이다.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미국의 역내 주도권은 큰 변화없이 유지될 것이며, 지역 강대국으로 부상한 일본과 중국의 위상도 점차 강화될 것이다. 러시아도 대내정세가 안정되어감에 따라 동북아에 대한 외교공세 강화를 통해 동북아에서 영향력 복원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미, 일, 중, 러 4국이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지역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경쟁할 것으로 보여, 동북아에서 협력과 갈등이 병존하는 이중적인 안보구조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동북아정세는 한반도의 평화정착에는 긍정적이나, 통일실현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동북아정세>

미국은 중간선거를 치루어야 하기 때문에 동북아에 대한 안보부담을 축소하고자 할 것이며, 일본과 「신방위협력지침」 후속조치를 적극 모색할 것이다. 1998년 3월 선출될 중국의 신지도부도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유기업 개혁과 금융개혁에 전력을 기울이면서, 주변국과의 안정적인 관계유지에 주력할 것이다. 일본 역시 금융불안에 직면하여 대미협력을 중시하게 될 것이며, 러시아도 극동지역 개발을 위해 미, 일, 중과의 관계강화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1997년 하반기부터 관계개선 조짐을 보였던 미·중관계는 금년 상반기 클린턴 미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더욱 호전될 전망이다. 미·중은 1997년 정상회담시의 합의에 기초하여 각료급 안보대화를 개최하고 안보협력을 강구할 것이며, 4자회담을 통해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그리고 클린턴 미대통령의 방중을 전후하여 중국이 왕딴(王丹) 등 반체제인사를 석방할 것으로 보여, 미·중간 인권대립도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평화우호조약」 체결 2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일·중도 쟝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과 츠하오티엔(遲浩田) 중국 국방부장의 방일, 일본 황태자의 방중을 계기로 긴장된 관계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중·러도 정상과 총리의 상호 교환방문을 통해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심화시켜 나갈 전망이다. 중·러는 1998년 4월 혹은 5월 러시아에서 제2차 「우호평화발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 서부국경선획정 작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내질서를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성하기 위한 강대국간 힘겨루기가 완전히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다. 연말로 예정된 대만 입법원 선거를 전후하여 대만해협에서 긴장국면이 재연될 경우, 미·중간의 대립이 다시 악화될 수도 있다. 또한 일본자위대의 역할증대와 과거사문제 그리고 댜오위따오(釣魚島) 영유권문제로 일·중간 이해대립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영토문제와 분단문제도 동북아정세 불안요인으로 계속 남게될 것이다.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을 둘러싼 한·중·일간 대립이 수면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환경오염문제와 난민문제도 동북아의 새로운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급진 성장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지만, 환경문제 개선에 투자할 여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한·중·일간 대기 및 해양오염 문제와 관련한 잠재적 갈등이 지속될 것이다.

<한반도 통일환경>

1998년 미, 일, 중, 러 4대국은 한반도의 급진적인 통일보다는 한반도 분단의 안정적인 관리에 우선을 두는 정책을 지속할 것이다.

세계 최대 정치·경제·군사대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은 4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을 주도하고, 북한과의 고위급 대화를 통해 북한의 연착륙을 유도할 것이다. 일본도 대북 수교교섭을 재개하여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하면서, 대북 지원을 통해 북한에서 안정이 유지되도록 할 것이다. 중국 역시 두 개의 한국정책을 통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북한에서 사회주의체제가 유지되도록 지속적으로 원조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에 대한 영향력 복원을 모색하고 있는 러시아는 한국 편향정책에서 남북한에 대한 등거리정책으로 한반도정책 변화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주변 4국의 한반도정책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에는 도움이 될 것이나, 한반도 통일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한반도에 대한 주변 4국의 현상유지정책은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다.

2. 북한정세

1998년 북한에서는 김정일이 국가주석에 추대됨으로써 김정일시대가 본격 개막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경제난 완화를 위해 대내외적으로 새로운 경제조치를 취할 것이며, 미·일과의 관계개선에 주력할 것이다. 북한은 내부결속 일환으로 남한당국 배제전략과 대남 적대정책을 지속하고 「4자회담」을 식량확보와 대미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지도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

구하고 식량난의 지속으로 사회질서의 이완이 가중되는 등 북한체제는 전반적으로 불안정할 것이다.

<정치동향>

1997년 북한정치에서 가장 큰 사건은 김정일의 당총비서 추대이다. 김정일이 당총비서에 추대됨으로써 북한은 최고사령관이 통치하는 변칙적인 통치행태를 종결시키고 정상체제로 환원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98년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와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현노선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김정일은 정권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자신에 대한 충성파를 상승이동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일의 측근인물이 당비서 및 당부장직을 맡아 전면에 나설 것이며, 혁명 1세대들은 예우차원에서 명목적인 자리를 맡아 일선정치에서는 물러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김정일은 당총비서, 인민군 최고사령관, 당중앙군사위원장 겸직 조항을 제정함으로써 당과 군부를 직접 지휘통솔하는 체제를 제도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정일은 1998년 4월 경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 제10기 최고인민회의 선거를 통해 주석직에 추대됨으로써 명실상부한 김정일시대를 열어 나갈 것이며 1980년 이래 열리지 않았던 제7차 당대회를 10월경 개최하여 제4차 7개년 경제계획을 발표하고, 경제청사진 및 과도적인 '전망목표'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동향>

1998년 북한에서는 경제체제의 구조적 모순심화와 수해복구의 지체로 인하여 경제난·식량난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며, 주민생활고가 악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 암시장이 성행하고, 근로자의 노동의욕 감퇴, 직장 이탈 등 노동질서 이완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북한당국은 체제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분적인 정책변화를 시도할 것이다. 비공식부문 경제의 확산을 묵인하고 농업부문에서 분조계약제 확대, 텃밭의 범위확대, 농민시장활성화 등의 개혁을 실시할 것이다. 또한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를 활성화할 것이며, 원산·남포 등 보세가공 수출 무역지대 지정 등의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은 외화획득이 용이한 관광산업분야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 바, 1997년 4월 발표한 4대관광지구(나진·선봉지구, 희령·온성 중심의 두만강지구, 신의주 중심의 압록강지구, 칠보산지구)의 개발을 본격화하여 1백만 관광객 유치목표를 달성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 정치체제의 경직성으로 인해 근본적이고 전반적인 경제개혁이 어렵기 때문에 1998년에도 경제침체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동향>

1998년도 북한은 각종 사회적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인덕정치'를 표방한 주민들에 대한 선무작업을 병행할 것이나 식량난으로 파생된 배급체제의 와해는 북한체제의 기본적인 사회통제 체제를 약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1997년과 마찬가지로 중국과의 접경지역을 중심으

로 북한 이탈 주민들이 증가할 것이다.

북한은 1997년에 끝나는 '고난의 행군기간'을 대체하여 1998년부터는 '사회주의 강행군'을 실시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으나 배급체제의 회복과 같은 근본적인 생활조건의 개선이 없이는 주민들의 사상적 동요를 억제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나진·선봉지역이나 신포지역에서 자본주의를 접하는 주민들은 엄격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적 사조를 전파하는 중요한 매개자 역할을 수행할 것이고, 이미 사상적 동요가 적지 않은 청년층은 잠재적으로 북한체제의 변화를 추구하는 집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

<대외정책>

1998년도 북한은 경제난·식량난 완화와 대외관계 개선을 위해 미, 일 등 국제사회에 대한 외교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국제사회로부터 인도주의적 차원의 식량지원 확보에 주력할 것이다. 특히 북한은 「미·북 제네바 기본합의」에 따라 핵동결을 준수하는 대신, 미국에게 대북 경제제재 추가완화 및 식량지원을 요구할 것이다. 북한은 4자회담 본회담에 참여하되 남북 당국간 대화보다는 대미 관계 개선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정권수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중국과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이다. 특히 김정일은 1998년 3월 새로이 선출될 중국 신지도부와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주석을 승계한 후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 북·일관계와 관련해서는 연초의 북송 일본인처 2진 방일을 시작으로 작년에 합의된 바에 따라 정부간 수교교섭이 재개될 것이다. 그러나 수교교섭이 재개되더라도 「배상문제」에 대한 이견 및 일본인 납치의혹 해소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아 수교문제가 조속한 시일내에 타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북한은 외교적·군사적 입지강화를 위해 러시아와의 관계복원을 추구할 것이다. 러시아도 동북아에서 북한의 전략적 중요성을 재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북·러관계는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군사동향>

1997년 북한의 군사동향은 첫째, 내부체제의 공고화를 위한 수단으로, 특히 한국과 미국의 군사위협을 강조하면서 내부 군사동원체제 강화를 독려하고, 둘째, 경제난의 심화에도 실질적인 군사력 증강 노력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는 2가지 특징을 나타냈다.

1998년에도 북한은 대내적 체제안정을 위해 미국과 남한의 군사적 위협의 강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특히 북한은 1998년 남한의 새정부 출범과 IMF체제하에서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악용하여 주한미군 철수 등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군사·안보적 수단을 이용, 남한사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적인 안보협상을 강화해서 한·미관계에 혼선을 초래케 하거나, 공격무기의 전진배치, 군사분계선 주변에서의 산발적인 무력시위를 통해 남한사회의 총체적 혼란을 도모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남동향>

1998년에도 북한은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는 대남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남한당국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지속할 것이나 대북식량지원과 관련, 민간단체들과의 개별접촉을 강화함으로써 정부

와 민간단체간의 이간을 조장할 것이다.

북한은 경수로 건설사업을 위한 한국근로자들의 방북, 식량지원을 위한 적십자회담 및 민간단체들과의 접촉, 임가공무역 확대 및 대북 투자유치를 위한 남한 기업인들의 방북에 대해서는 문호를 넓힐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은 IMF체제 하에서 실업문제 등으로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에 편승하여 남한사회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통일전선전술을 강화할 것이다. 특히 북한은 IMF사태를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기회로 삼아 대남공세 및 대내 체제정당성 강화에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3. 남북한 관계

남북한 정부수립 50주년이 되는 1998년 역시 남한 신정부의 전향적인 대북정책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개선전망은 밝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식량지원을 매개로 적십자회담을 통해 명맥을 유지했던 남북관계는 남한의 외환위기에 따른 대북지원의 어려움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다.

북한은 식량확보를 위해서 남한과의 관계개선보다는 미국 및 일본쪽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높아 기존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정책을 수정하여 남북관계 개선으로 정책을 선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남북대화>

1998년 남북관계의 최대 이슈는 정상회담의 성사와 4자회담의 진전 여부이다. 남한 신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예견하고 있고, 김일성

사망으로 연기된 정상회담 합의가 김정일의 당총비서 공식 승계로 유효하게 된 만큼 남북 정상회담이 핵심적 현안으로 부상할 것이다.

북한은 체제불안정으로 인하여 4자회담과 같은 다자간 회담을 제외한 남북한 당국간 직접대화에는 쉽사리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남한의 신정부가 교류·협력에서 전향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북한이 남한 신정부의 대북정책을 타진하기 위해 단기성 대화를 제의할 가능성은 있으나 전쟁위기와 긴장조성을 통하여 내부체제위기를 관리하고 있는 북한이 남북 당국간 대화의 정례화·제도화를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1997년 두차례에 걸쳐 옥수수 10만톤 상당의 대북지원을 합의했던 남북적십자회담은 계속될 것이다. 지원물자의 판문점 통과 및 분배과정에서의 한적요원 입회문제를 둘러싸고 남북간의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북한의 식량난이 단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도적 차원의 적십자회담의 틀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4자회담 제1차 본회담의 합의에 따라 1998년 2월 북경에서의 실무회담 개최에 이어 3월 제네바에서 제2차 본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4자회담을 통해 식량지원 확보를 기도하는 북한은 식량지원을 의제와 연계시키기 위하여 본회담을 사실상 예비회담화하거나 자신들이 의제로 제기한 주한미군문제와 미·북평화협정체결 문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견지하여 회담운영의 주도권을 장악하려 할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전략에도 불구하고 4자회담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매우 적극적이며, 중국도 이에 호응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1998년 하반기 중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경수로사업>

경수로사업은 북한의 핵개발을 동결하기 위한 핵심사업이라는 데 한·미·일 3국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고, 북한 역시 이 사업에 매우 적극적이기 때문에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포의 본공사 부지정지작업으로 남북간 인적·물적 교류도 증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경수로사업은 부지준비공사가 완료되더라도 본공사를 위한 KEDO와 한전간의 상업계약 체결, 한·미·일 3국간의 비용분담 합의, 북한의 본공사 착수 승인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다. 비용분담 협상은 각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 사안일 뿐 아니라, 특히 외화부족, 실업문제 등 경제적 어려움에 비추어 한국의 비용분담율을 둘러싸고 국내적으로 많은 논란이 일어날 것이다.

<교류·협력>

1997년 남북교역과 경제협력관계는 총교역규모 3억 달러를 상회할 만큼 순조롭게 증가·발전하는 양상을 띠었다. 위탁가공교역은 북한이 외화획득 및 경공업 발전기회 확보를 위해 선호하고 있고 남한기업도 북한의 저임 노동력 활용 및 대북투자 대비차원에서 적극적임을 감안할 때 계속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위탁가공교역을 제외한 남북경협은 IMF체제로 인한 남한기업의 대북사업 축소 등으로 한계가 있을 것이다.

남북한 사회·문화교류는 북한이 원칙적으로 피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교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했으나 외화획득을 위해 선별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만큼, 1998년에도 학술, 종교분야를 중

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주의적 사안>

남북간 이산가족문제는 인적 왕래로 인한 개방분위기 확산과 북한 체제의 취약성 노출을 우려하는 북한의 소극적 태도때문에 1998년에도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다.

작년 부부간첩사건에서 1970년대에 실종된 고교생들의 납북이 확인됨으로써 납북억류자 문제가 새롭게 부각되었으나, 북한의 완강한 거부 태도때문에 1998년에도 납북억류자 및 국군포로 송환문제에서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식량난 가중으로 1998년에도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 요구는 증가할 것이나, 남한의 경제사정 악화로 정부차원의 대북지원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남한 신정부의 전향적 대북정책에 따라 민간차원의 대북식량지원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목 차 -

Ⅰ. 통일환경 1
1. 동북아정세 1
가. 동북아 안보환경 1
(1) 지역질서의 다극화 추세 1
(2) 역내 강대국간 이해대립 3
(3) 영토분쟁과 분단문제 5
(4) 환경 및 난민문제의 대두 7
나. 동북아 4국의 상호관계 8
(1) 미·일관계 8
(2) 미·중관계 10
(3) 미·러관계 15
(4) 일·중관계 17
(5) 일·러관계 20
(6) 중·러관계 22
2. 한국의 주요 대외관계 24
가. 한·미관계 24
나. 한·일관계 27
다. 한·중관계 29
라. 한·러관계 31
3. 한반도 통일환경 34

Ⅱ. 북한정세 36
1. 대내정세 36
가. 정치동향 36
나. 경제동향 39
다. 사회상황 44
라. 군사동향 47

2. 주요 대외동향 50
가. 북·미관계 50
나. 북·중관계 53
다. 북·일관계 56
라. 북·러관계 58
3. 대남동향 60

Ⅲ. 남북한 관계 63
1. 남북대화 63
2. 4자회담 65
3. 경수로사업 68
4. 교류·협력분야 70
가. 경제분야 70
나. 사회문화분야 74
5. 인도주의적 사안 78
가. 대북지원 78
나. 이산가족문제 82
다. 인권문제 83
라. 납북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포로 85
4. 국제무대에서의 남북한 관계 86

1997년도 주요사건일지 89

최근 발간자료 안내

- 도 표 목 차 -

<표 1> 북한의 국민총생산 및 경제성장율 ····· 40
<표 2> 북한의 1990년대 대외무역 규모 ····· 41
<표 3> 분조관리제의 변화 ····· 42
<표 4> 년도별 남북교역 규모 ····· 71
<표 5> 년도별 반입품목 구성 ····· 72
<표 6> 년도별 반출품목 구성 ····· 73
<표 7> 한국의 대북지원('95.6~'97.11.25) ····· 80
<표 8> 국제사회의 대북지원('97.11.25 현재) ····· 81
<표 9> 제3국을 통한 이산가족 교류 연도별 성사 현황 ····· 82

Ⅰ. 통일환경

1. 동북아정세

가. 동북아 안보환경

동북아는 여전히 냉전 이후의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과도기에 처해있다. 따라서 미, 일, 중, 러 4국이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지역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경쟁함으로써, 동북아에서는 협력과 갈등이 병존하는 이중적 안보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1) 지역질서의 다극화 추세

1997년에도 동북아에서는 다극화 추세가 지속되었다. 미국의 역내 질서 주도권은 큰 변화없이 유지되었지만, 일본과 중국의 역내 위상이 상대적으로 강화되었다. 러시아도 내부 정세의 안정을 바탕으로 동북아에 대한 외교공세를 강화함으로써 동북아에서 영향력 복원을 모색하였다. 이로써 동북아질서는 미국을 정점으로 하여 4대 강국이 정립하는 양상을 보였다.

세계 유일 패권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은 동북아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행사해 왔지만, 지역안보를 일본과의 협력 하에 유지하기 위해 미·일 「신방위협력지침」을 확정(9.23)하였다. 미국이 일본과 「신방위협력지침」을 채택하게 된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는 동북아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급사태를 역내 동맹국인 일본과의 협력

을 통해 해결하려는 데 있다. 또한 미국은 일본과 한국에 대해 미군 주둔 경비의 대부분을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안보부담을 축소시키고자 하였다. 미국이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비의 대부분과 대북 중유제공 경비의 일부를 한국에 부담시키려 하였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역내에서 경제력에 걸맞는 정치·군사 역할확보를 모색하고 있는 일본은 미국과 「신방위협력지침」을 채택하는 한편,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에 가입하기 위해 유엔에 상당한 규모의 재정 분담금을 제공하고 역내국가에 대한 평화공세를 강화하였다. 일본은 미국과 「신방위협력지침」을 채택함으로써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동시에 역내 안보역할을 자연스럽게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일본은 유사시에 40개 항목에 걸쳐 안보역할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일본은 러시아와 2000년까지 평화조약을 체결하기로 약속(11.1)하고, 중국과 최고지도자 교환방문을 통해 과거사문제로 인한 마찰소지를 해소시키기 위해 진력하였다.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은 실현되지 못하였지만, UN개혁법안이 부결되어 국제무대에서 일본의 영향력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개혁·개방정책 성공으로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는 중국은 홍콩주권의 회복(7.1), 15차 당대회의 개최(9.12~18) 및 대미관계 개선 등을 통해 동북아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중국은 홍콩주권을 성공적으로 회복함으로써 중화민족주의(中華民族主義)를 고취시켜 내부단결을 기할 수 있게 되었고, 중국경제의 규모도 대폭 확대되고 있다. 또한 대만통일에 대한 중국의 자신감이 강화되고,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외교활동 공간이 확대되었다. 2002년까지의 국정방침을 확정한 15차 당대회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대미관계를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도 역내에서 중국의 위상 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1997년 러시아는 동북아에 대한 영향력 복원정책을 강화하였다. 러시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동유럽 확대 등 유럽지역에서의 상대적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동북아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있다. 러시아는 일본에 대해 「전략적 동반자관계」 구축을 제의하는 한편, 일본기업의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 참여를 촉구하였다. 또한 러시아는 중국과의 동부 국경선문제를 타결(11.10)짓고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심화시켰다. 아울러 러시아는 한국 일변도 정책을 지양하고 북한과의 관계복원을 모색하였다.

1998년에도 동북아에서는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4강간 다극화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미국은 중간선거를 치루어야 하기 때문에 동북아에 대한 안보부담 확대를 원하지 않을 것이며, 일본과 「신방위협력지침」 관련 보완사항을 협의하게 될 것이다.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에서 선출될 중국의 신지도부도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유기업 개혁문제에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여, 주변국과의 안정적인 관계유지를 바랄 것이다. 일본 역시 금융불안에 직면하여 대미 협력을 중시하게 될 것이며, 러시아도 극동지역 개발을 위해 미, 일, 중과의 관계강화를 모색하게 될 것이다.

(2) 역내 강대국간 이해대립

탈냉전기 동북아 역내 강대국들은 자국에 유리한 방향의 신질서 구축을 위해 경쟁하고 있다. 특히 동북아 신질서 구축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행사하고 있는 미·중간의 이해대립이 수면 하에서 지속되었다.

미국은 동북아에서 자국의 위상에 도전할 수 있는 국가의 출현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반면, 중국은 홍콩주권 회복을 계기로 동북아에서 중화질서(中華秩序) 재현을 모색하였다. 미국 의회와 언론계는 '중국위협론'을 제기하면서 중국 군사정책의 투명성 제고를 요구하고, 중국내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하였다. 1997년 5월부터 미국이 대만에 대해 F16 전투기를 제공하기 시작한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도 중국견제에 목적이 있었다. 또한 미국이 일본과 「신방위협력지침」을 채택하여 일본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한 것도 중국의 부상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미국의 중국견제 정책에 대응, 중국은 러시아와의 관계강화에 매진하였다. 중국은 1997년 4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공동성명」을 통해 세계질서가 특정국가에 의해 주도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동부 국경선획정조약」을 체결하여 안보적 신뢰를 한층 강화하였다. 중국의 대러 관계강화 정책은 동북아에서 미국의 패권전략에 대처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미국은 일본과의 안보협력 강화가 중국 견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고, 중·러도 양국간의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가 제3국(미국)을 겨냥하는 동맹적 성격을 띤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과 중·러간 관계강화 노력은 동북아에서 4대국간 이해대립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으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에서 냉전의 잔재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는 정부차원의 다자안보대화 미비에서 찾을 수 있다. 동북아지역은 현재도 지역국간 상호 불신으로 군비경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를 해소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결여되어 있다. 미국을 비롯한 동북아지역국들은 양자간 동맹관계를 통한 안보유지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협력안보 개념을 상대적으로 덜 중시하고 있다.

결국 동북아에서는 정부차원의 다자안보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제2트랙」(Track Ⅱ) 외교로 불리우는 비정부간·민간차원의 다자안보대화만이 운영되고 있다. 그중 1993년부터 연례적으로 「동북아협력대화」(NEACD)가 개최되고 있는데, 1997년에는 제7차회의가 일본에서 열렸다(12.2~4). 여기에서 한, 미, 일, 중, 러 5개국 대표는 역내 국가간 신뢰구축을 위한 국방정보 공유방안을 협의하고, 에너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1998년에도 동북아지역의 안보는 다자안보대화보다는 양자간 안보협력을 통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일은 「신방위협력지침」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있고, 상반기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중국방문이 예정되어 있다. 또한 1998년 8월 일·중 「평화우호조약」 20주년을 전후하여 장쩌민(江澤民) 주석의 일본방문이 성사될 것이라는 점에서, 일·중간 안보협력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동북아 역내 강대국간 이해대립이 일부 해소될 가능성도 있으나, 역내 질서를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성하기 위한 강대국간 마찰이 완전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3) 영토분쟁과 분단문제

중·일간 따오위따오(釣魚島) 영유권문제, 일·러간 북방 4개 도서 영유권문제 및 한·일간 독도 영유권 문제로 인한 갈등도 동북아질서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배타적 경제수역」(EEZ)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어업협정 체결 논의과정에서도 지역국간 이해대립상이 표출되었다. 아울러 한반도문제와 대만해협 문제도 동북아 정세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댜오위따오는 중국 동쪽 해상에 있는 무인도로써 중·일간 분쟁지역으로 남아 있다. 1978년 중·일간 「평화우호조약」 체결 당시 댜오위따오문제 해결을 후대에 맡기기로 함으로써, 동 문제를 둘러싼 중·일간 대립이 분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1996년이래 일본의 우익단체들이 댜오위따오에 일장기를 게양하고, 등대를 설치함으로써 중·일간에 외교적 마찰이 심화되었다. 1997년에도 일본 의원이 댜오위따오에 상륙하여 댜오위따오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였으며, 이에 대해 중국정부가 공식 항의(5.8)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와 관련, 중·일은 「어업협정」 체결시(11.11)에도 댜오위따오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현행질서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일·러간에도 북방 4개 도서 영유권문제를 둘러싸고 마찰이 지속되었으며, 1997년에도 동 문제에 대해 일·러간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 일본은 북방 4개 도서문제 해결을 위해 경협카드를 계속 활용했으며, 러시아는 안보전략적 이유와 극동지역 러시아인의 반발로 북방도서 반환을 반대했다. 1997년 11월 하시모토-옐친 정상회담시에도 일·러는 2000년까지 평화조약 체결을 위해 노력하자는 데 합의하였을 뿐, 북방도서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도출하지 못하였다.

독도 영유권문제도 동북아정세에 잠재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국의 해양수산부장관이 일본측의 반발로 독도 접안시설 준공식 참석을 포기했으며, 일본은 독도주변 공해수역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업협정」을 파기할 것이라고 한국에 압력을 가하였다. 독도문제는 단순히 영유권 차원의 문제를 넘어 한·일관계 진전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한반도와 대만해협에서의 긴장이 1997년에 들어 다소 완화되었으나, 이들 문제는 여전히 동북아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반도에서는 4자회담 추진과 대북 경수로 건설사업 진행으로 긴

장 분위기가 상당부분 완화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대남 배제전략 지속으로 남북 당국간 대화가 성사되지 못했다. 대만해협에서도 미·중 관계 개선 움직임과 맞물려 1996년과 같은 군사적 긴장국면이 조성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중국과 대만은 중국의 홍콩주권 회복 이후 국제무대에서 치열한 경쟁을 전개하였다.

1998년에도 동북아 지역국간 영토문제가 완전히 타결되기 어려울 것이며, 대만해협의 긴장국면이 1997년과 별 차이없이 지속될 것이다. EEZ 설정을 둘러싼 한·중·일간 대립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대만 입법원 선거과정에서 대만독립 여론이 확산될 경우, 대만해협 사태가 다시 악화될 소지도 있다.

(4) 환경 및 난민문제의 대두

환경오염문제와 난민문제는 동북아안보에 새로운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특히 중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한국과 일본에 유입됨으로써 한·중·일간 잠재적 마찰요인으로 등장하였다. 석탄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삼고 있는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막대한 오염물질을 대기와 황해상에 그대로 배출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에서 내리는 산성비의 상당부분이 중국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은 양자 및 다자간 접촉채널을 통해 중국에 환경오염 개선을 요구하였다. 특히 일본은 1997년 9월 하시모토 총리 방중시 중국의 대기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무상 차관제공을 약속하고, 11월 리펑(李鵬)총리 방일시 중국과 「환경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

난민문제도 동북아지역의 새로운 불안요인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북한의 경제난 심화로 1997년 현재 1,500명이 넘는 북한주민이 중국

과 러시아 등지로 탈출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많은 북한이탈 주민이 중국 동북삼성(東北3省) 지역과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유랑하고 있으며, 이들의 인권문제가 국제문제로 대두되었다.

1998년에도 중국의 급진 성장정책이 변화되지 않을 것이며,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환경문제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한·중·일간 대기 및 해양오염 문제와 관련한 잠재적 대립이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북한의 식량난 해결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바, 북한주민의 탈북 러시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나. 동북아 4국의 상호관계

(1) 미·일관계

1997년 미·일은 「방위협력지침」 개정(9.23)을 통해 안보협력을 강화하였으며, 미국은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노력을 지지하였다. 따라서 미·일간 정치·군사적 협력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통상문제와 일본의 대북 식량지원문제 등 경제분야에서는 미·일간에 마찰이 일어났다.

일본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희망하였고, 미국은 유엔의 재정난 해소와 광범한 세계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의 외교적 노력을 지지·협력하였다. 이께다 일본 외상은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에게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2.23)하였고, 미국은 제52차 유엔총회에서 일본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에 가입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선도하였다. 그러나 일부 국가들의 반대로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문제는 유엔총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하였다.

1997년 4월 하시모토 총리와 규마 방위청 장관은 아·태지역내 미군의 현 수준 유지를 지지하고, 주일미군의 지속적 주둔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이는 대미 방위협력 강화를 위한 일본의 고려에 따른 것이었다. 미국은 「국방전략검토보고서」(QDR)에서 동아시아에 10만명의 미군을 잔류시킬 것과 동아시아지역 유사시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5.19)하였다.

미·일 「신방위협력지침」은 1996년 4월 「신안보공동선언」의 합의에 입각하여 방위협력 범위를 기존의 극동지역에서 아·태지역 전체로 확대하고, 일본주변 유사시 아·태지역 미군에 대한 일본의 후방지원을 명시하였다. 미국은 일본과 동맹을 강화함으로써 아·태지역에서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억제하는 동시에 일본의 안보부담을 확대하려 하였다. 일본은 미국의 안보비용 분담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중국의 군사대국화를 견제하고, 동북아 지역에서 경제력에 걸맞는 정치·군사적 위상의 확보를 추구하였다.

엔저(円低)현상과 일본의 수출드라이브 정책으로 대일 무역적자가 확대되면서, 미국은 대일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통상압력을 강화하였다. 올브라이트 미국무장관은 사또 일본 통산장관과의 회담에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관한 미·일간의 합의가 전면적으로 실시되지 않을 경우 통상마찰이 재연될 수 있음을 경고(2.23)하였으며, 고어 미부통령은 하시모토 일본총리와의 회담에서 일본의 불공정무역관행 시정을 촉구(3.25)하였다. 클린턴 미국 대통령도 일본에 시장개방 확대를 강력하게 요구(11.25)하였다. 미국은 대일 무역제재 조치를 통해 일본의 불공정무역관행을 시정하려 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미국과의 무역분쟁을 WTO내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일본의 대북 식량지원 문제와 관련하여 미·일간에 이견이 있었다. 미국은 워싱턴 정상회담(4.25)과 덴버 정상회담(6.19)에서 일본에게

대북 식량지원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미국의 대북 연착륙 정책에 동조하면서도, 대북 식량지원 문제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일본은 북송 일본인 처의 고향방문이 실현되고 일본인 납치의혹이 해소되어야만 대북 식량지원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북한이 북송 일본인 처의 고향방문 허용 입장을 밝힘(8.22)으로써, 일본정부는 약 2,700만 달러(쌀 67,000톤) 상당의 대북 식량지원을 결정(10.9)하였다.

미·일 「신방위협력지침」은 "무엇을 할 것인가"하는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동 지침 이행을 위한 후속 작업을 진행하기로 되어 있다. 1998년에도 미·일간 안보협력은 지속되는 반면, 일본의 대미 무역흑자 폭이 축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미·일간 통상마찰은 계속될 것이다.

(2) 미·중관계

1997년 상반기 미·중간에는 「미·일 신방위협력지침」의 대만해협 포함 여부,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제공, 중국내 인권문제, 중국의 대미 불법 선거자금 지원 의혹, 중국의 이란에 대한 핵기술 수출문제 및 티벳과 홍콩문제 등으로 인해 긴장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미·중간의 긴장은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2.24~25), 고어 미 부통령(3.24~28), 첸치천(錢其琛) 중국 외교부장(4.28~30), 류화츄(劉華秋) 중국 국무원 외사판공실 주임(10.8~10),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10.26~11.3) 등의 상호 교환방문을 통해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현격하게 완화되었다.

대만문제는 1997년에도 미·중관계 진전을 저해하는 최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미국은 1992년 부시 대통령 재임당시 판매를 약속하였던 F-16 전투기 150대중 일부를 대만에 제공하기 시작하였는데, 이에 대해 중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중단을 약속한 「8.17 공동성명」의 정신을 위반한 것이라며 비난하였다. 또한 미·일간 「방위협력지침」 개정과정에서 일본 주변 유사 범위에 대만해협 사태의 포함 여부가 제기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미·중간에 갈등이 전개되었다. 장쩌민의 방미시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대만의 유엔 가입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힘으로써 대만 문제를 둘러싼 미·중간의 갈등은 일단 수면 아래로 잠복하게 되었다. 그러나 미 공화당과 미국내 여론이 여전히 대만지지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바, 대만문제는 미·중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남아있다.

중국내 인권문제도 미·중관계에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되었다. 미 국무부는 「인권백서」를 발간(1.30)하여 중국내 인권상황을 비난하고, 유엔인권위원회에 「중국 인권결의안」을 상정(3.10)하여 중국내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티벳문제 담당 특별조정관을 임명(10.31)하여 티벳 소수민족의 종교·신앙의 자유를 요구하였다. 미 의회 차원에서도 대중 인권개선 압력이 강화되었는데, 미 하원은 「중국 인권감시강화법안」(7.30)과 「종교박해제재법안」 및 「강제임신중절제재법안」(11.6) 등을 통과시켜 중국정부에게 정치범 석방, 국제적십자사의 죄수면담 허용, 유엔 인권협약 준수를 촉구하였다.

중국은 미국측의 인권개선 요구를 내정간섭이라고 일축하면서도, 일부 정치범 석방과 「인권백서」 발간(4.1)을 통해 미국의 압력을 완화시키려 하였다. 중국은 최초로 유엔 인권전문가에게 중국내 정치범과 사적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허용(10.9)하고,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정식 가입(10.27)하는 한편, 중국내 대표적인

반체제인사인 웨이징성(魏京生)을 석방(11.16)하였다. 이로써 인권문제로 인한 미·중간의 마찰은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다소 완화되었다. 또한 미국도 인권문제로 인하여 중국과의 관계가 균열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중국의 대미 불법 선거자금 제공 의혹은 미·중관계의 새로운 현안으로 등장하였다. 미 공화당과 정보기관들은 중국정부가 1996년 미 의원들과 대통령 후보진영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치헌금을 제공하였다는 혐의를 문제시하였다. 이와 관련, 미 공화당 의원들은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MFN) 연장심사 기간을 기존의 1년 단위에서 6개월 또는 3개월 단위로 단축하고, 연장 여부 심사도 보다 강화하도록 미 행정부에 촉구하였다.

중국의 대량살상무기 수출문제도 미·중관계를 긴장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미국은 이란에 대한 중국의 핵기술 수출이 지역안정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대중 첨단기술 수출금지를 지속시켰다. 이란에 대한 중국의 화학무기와 핵기술 수출문제와 관련한 미·중간의 마찰은 중국이 「화학무기금지협약」에 가입(4.25)하고, 「핵수출통제조례」를 제정(9.10)하여 무기수출을 자제하겠다는 의지를 밝힘으로써 완화될 수 있었다. 장쩌민이 미·중정상회담시(10.29) 클린턴에게 이란에 대한 핵기술 수출 동결을 확약함으로써, 미국은 중국에 대한 핵기술 수출금지 조치 해제를 약속하였다.

이와 같이 미·중간에 부각되었던 갈등 현안들이 어느 정도 완화됨에 따라, 미·중간 군사·안보 협력 움직임이 나타났다. 중국 남해함대 소속 군함이 미국 본토에 2차대전 이후 최초로 기항(3.21~25)하였으며, 샬리카시빌리 미 합참의장(5.12~16)과 요한슨 미해군 작전부장이 중국을 방문(10.5~9)하여 중국의 군사지도자들과 안보협력 문제를 논의하였고, 푸첸요우(傅全有) 중국군 총참모장이 미국을 방문(8.10~

13)하여 미국 군지도부와 접촉하였다. 특히 장쩌민의 미국방문시 양국 정상간 직통전화 설치와 각료급 안보대화 정례화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로써 미·중은 최초로 차관급 「국방협의회」를 개최(12.11~12)하여 국방분야의 협력을 제도화하였다. 아울러 미·중은 해상의 우발적인 충돌발생 가능성에 대처하기 위해 「해사협력협정」을 체결하였으며, 4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도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무역 역조문제와 미국의 대중 MFN 연장문제 그리고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문제 등 경제·통상문제와 관련해서도 미·중간에 마찰이 노정되었다. 미국이 중국의 대미 불공정무역 관행을 이유로 중국산 섬유류의 대미 수출쿼타 감축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미·중간 섬유무역 마찰이 일어났다. 또한 1996년 미·중간 교역에서 미국이 약 380억달러에 달하는 무역적자를 기록하였는데, 미국은 미·중간 교역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무역적자가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과 시장개방 미비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측의 시정을 촉구하였다.

1997년 중국은 두차례에 걸쳐 관세율 인하조치를 발표함으로써 WTO에 조기 가입하고자 하였으나, 미국의 반대로 중국의 동 기구 가입이 지연되고 있다. 미국은 불공정 무역관행을 전면 중단하고 시장개방 조치를 보다 확대해야만 중국의 WTO 가입을 지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중국은 개발도상국 지위로 WTO 가입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중국이 개발국 지위로 WTO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경제문제와 관련한 미·중간의 이해대립은 중국의 관세율 인하조치와 대규모 대미 구매사절단 파견 및 경제관료의 상호 교환방문 등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중국은 관세율을 17%로 대폭

인하(10.1)하였고, 구매사절단을 파견하여 42억 6,000만달러 상당의 미국상품 구매를 약속하였다. 또한 양국은 「상하이(上海) 자동차회사 합작의정서」를 체결(3.27)하고, 「미·중 통상공동위원회」를 개최(10.7)하여 무역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미국이 미·중 정상회담시 중국에게 첨단기술 수출 재개 방침을 천명함으로써 미·중간 경제교류·협력이 확대될 수 있게 되었다.

1989년 천안문사건 이래 최초로 미국 대통령의 방중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1998년에도 미·중간 화해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클린턴의 방중을 전후하여 중국이 왕딴(王丹) 등 중국 반체제 인사들을 석방할 것으로 보여 미·중간 인권대립이 다소 완화될 것이다. 또한 미·중은 1997년 정상회담시의 합의에 기초, 각료급 안보대화를 개최하여 상호 안보협력을 강구할 것이며, 한반도 등 국제질서의 안정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 또한 중국의 시장개방 확대를 조건으로 미국이 중국의 WTO 가입을 지지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이 이란과 파키스탄에 대한 핵기술 수출 중단 약속을 충실하게 이행할 경우, 미국이 대중 첨단기술 수출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바, 미·중간 교역규모가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다만 1998년 미국에서 중간선거가 실시될 예정으로 있는 바, 미 공화당이 대중정책을 선거전략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대만문제, 인권문제 그리고 대중 MFN 연장문제가 미·중관계를 경색시키는 요인으로 전면에 부각될 수 있다. 결국 1998년에도 미·중관계는 협력과 갈등이 병존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3) 미·러관계

1997년 미·러는 NATO의 동유럽 확대와 「NATO-러시아 합동위원회」 출범, 핵무기 감축시한 연장 합의 및 대북 문제에 대한 공조 등으로 대체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미·러간에는 러시아의 핵실험과 미국산 슈퍼컴퓨터의 군수전환 가능성,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군사제재 및 한국에 대한 러시아의 미사일 판매 문제 등을 둘러싸고 부분적으로 갈등이 노정되었다.

세계적 차원에서 미·러 양국은 헬싱키 정상회담(3.20~21)을 통해 군축관련 4개 공동성명과 경제관련 1개 공동성명을 채택하였고, 파리에서 탈냉전시대의 유럽 안보질서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NATO-러시아간 기본협정」에 서명(5.27)하였다. 동 협정에서 러시아는 NATO의 동유럽 확대를 수용하는 대신 「NATO-러시아 합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안보문제에 대해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NATO는 동유럽에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고 재래식 전력을 증강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로디오노프 러시아 국방장관은 미국을 방문하여 코언 미 국방장관과 「미·러 군사협력협정」을 체결(5.13)하고, 공동 군사훈련과 상호방문 확대, 핵무기 통제체제 유지 등 군사·안보협력을 강화하였다. 고어 미 부통령은 러시아를 방문하여 체르노미르딘 총리와 회담을 갖고 러시아내 플루토늄 생산 원자로 3기를 미국의 기술 및 재정지원을 통해 2000년부터 민수용으로 전환하기로 합의(9.23)하였다.

미·러 외무장관은 1993년 체결된 제2단계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거리핵미사일 감축시한을 2007년 말까지 연장하고, 해체 대상 미사일의 퇴역을 2003년말까지 완료하기로 하는 2개의 합의서에 서명(9.26)하였다. START Ⅱ의 이행시한이 수정됨으로써 러시아 의회의 비준이 종전보다 용이해졌다.

NATO 및 핵문제와 관련한 이견조정에도 불구하고, 미·러 양국은 러시아의 반대로 발트 3국의 NATO 가입문제에 합의하지 못하였다. 미국은 러시아의 지하 핵폭발실험 가능성을 탐지하고 러시아에 해명을 요청(8.28)하기도 하였다. 미국산 슈퍼 컴퓨터를 통한 러시아의 핵무기 모의실험과 유엔 무기사찰단의 입국을 금지하는 이라크에 대한 군사제재를 둘러싼 갈등도 미·러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미·러는 북한문제 해결을 통한 동북아지역 안정에 공감하는 자세를 보였다. 워싱턴에서 개최된 미·러 국방장관회담시(5.13) 로디오노프 러시아 국방장관은 북한의 불안정을 우려하여 한반도 긴장고조 방지에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코언 미국방장관은 한반도에서 긴급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러시아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미국의 「몬트레이 국제연구소」와 러시아 외교아카데미의 「국제문제연구소」는 1997년 6월 「북한보고서」를 공동 발표하여 대북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였다.

세계 주요국 정상들의 회의체인 G-7은 1997년부터 러시아를 포함시킴으로써 G-8으로 확대되었다. 덴버에서 개최된 G-8 정상회의(6.20~22)는 공동선언에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배치 및 수출의 중단을 촉구하고 4자회담 개최노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북한에 대해 핵동결 조치의 지속과 남북대화 참석을 요구하였다.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과 관련, 러시아는 표면적으로 극동지역의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러시아는 일본에 대해서 일본자위대의 역할확대에는 투명성이 요구된다는 입장을 천명(9.25)하였다. 또한 옐친 대통령은 미국이 아시아에서 균형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지적(11.7)하는 등 미국을 지나치게 비판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아·태지역에 대한 미·러의 무기수출 경쟁은 1996년에 비해

심화되었다. 이는 러시아가 첨단무기들을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에 저렴한 가격으로 수출함으로써 무기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함에 따라 기득권 세력인 미국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중국과 SU-27 전투기의 기술이전 문제를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 S-300 미사일 수출을 모색함으로써 패트리어트 미사일 판매를 희망하고 있는 미국과 갈등을 겪었다.

1998년 미·러는 안보협력을 지속함으로써 동반자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미국은 현재 NATO의 동유럽 확대와 함께 관련국들과의 공동군사훈련 실시 및 석유개발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흑해와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러시아가 동 지역에 대해 기득권 유지를 강조하고 있는 바, 미·러간 영향력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아·태지역에서 무기수출을 둘러싼 미·러간 갈등은 지속될 것이나, 북한의 미사일 개발·판매 저지와 핵동결 유지를 위한 미·러간의 협력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4) 일·중관계

일·중은 국교정상화 25주년을 맞이하여 총리간 상호 교환방문을 통해 미래지향적 관계발전을 약속하였으나, 과거사문제, 따오위따오(釣魚島) 영유권문제 및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등으로 인하여 양국간 정치·안보적 긴장관계가 지속되었다. 그러나 일본이 1995년 이래 중단하였던 대중 무상원조를 재개하고 1997년도 분으로 2,029억 엔에 이르는 차관 제공을 약속함으로써, 일·중간 경제협력관계는 한층 발전될 수 있는 계기를 맞이하였다.

1997년 일·중간에는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문제로 인하여 긴장이 조성되었다. 미·일은 「신방위협력지침」을 확정하여, 일본주변

유사시 협력문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일본의 카지야마 관방장관이 일본주변 유사범위에 대만해협이 포함된다는 입장을 밝힘(8.17)으로써, 미·일 「신방위협력지침」에 대한 중국의 우려가 강력하게 표출되었다. 리펑 중국 총리는 일본주변 유사범위에 대만해협이 포함될 경우 이를 내정간섭으로 간주하여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일본측에 압력을 가하였다. 중국은 「미·일 신방위협력지침」 확정을 계기로 일본의 역내 군사적 패권국 부상 가능성이 증대되어 지역안정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중국의 통일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경계하였던 것이다.

결국 하시모토 일본 총리는 일본주변 유사사태가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상황적 개념'이라는 입장을 밝힘(9.4)으로써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일본주변 유사범위에 대만해협을 포함시킬 것인지의 여부는 여전히 일본과 미국의 독자적 판단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점을 들어 일본측에게 보다 분명한 입장 표명을 촉구(11.13)하였다.

과거사 문제와 따오위따오 영유권 문제도 일·중관계를 긴장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중국은 일본정부 관리들의 그릇된 역사인식이 고쳐져야만 양국간에 진정한 신뢰가 구축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3.29)하였다. 또한 일본 신진당 소속 의원이 따오위따오에 상륙한 사건이 발생(5.7)하여, 일·중간에 외교적 마찰이 발생하였다. 중국은 이를 주권침해 행위로 규정, 일본측에 강력한 항의를 전달하였다. 이와 관련, 리펑 총리 방일시(11.11~16) 「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일·중은 영유권 분쟁지역인 북위 27도에서 30도 40분까지의 중국 동쪽 해역를 「공동관리수역」으로 설정하고, 따오위따오 주변지역은 현행질서를 유지하기로 하는 선에서 논의를 매듭지었다.

이와 같은 일·중간 정치·안보적 대립은 이께다 일본 외상의 방중

(3.29~30), 하시모토 일본총리의 방중(9.4~7) 및 리펑 총리의 방일 등을 통해 점차 완화되었다. 일·중은 군지도자의 교류를 확대하기로 하고, 외교·국방 실무대화를 국장급에서 각료급으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일본은 중국측에 미·일·중·러 4개국 평화회의 개최안을 제의(11.12)하였는데, 이러한 논의 자체들도 일·중간 안보적 신뢰를 회복시키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나아가 숑꽝지에(熊光楷) 중국군 부총참모장이 일본을 방문(11.30~12.2)하여 일본 자위대 지도자들과 안보협력문제를 논의하였다.

경제·통상부문에서 일·중관계는 한층 진전되었다. 이께다 일본외상 방중시 일본은 중국 난징시(南京市) 의료장비 구입 지원을 위해 17억 엔에 이르는 무상원조를 재개하기로 약속하였다. 또한 일·중은 「일·중 발전자금협력의향서」(11.11)와 「환경협력협정」(11.13)을 체결하여 경제·환경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일본은 중국과의 물자무역부문 협상 타결(9.4)과 서비스무역부문 협상(11.11) 진전을 계기로 중국의 WTO 가입 지지입장을 강화하였다.

1998년에도 정치·안보면에서는 일·중간의 대립이 지속되는 반면, 경제면에서는 협력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중 「평화우호조약」 체결 20주년을 맞이하여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 및 츠하오톈(遲浩田) 중국 국방부장의 일본방문과 일본 황태자의 중국방문이 성사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일본자위대의 역할증대와 과거사 문제 그리고 따오위따오 영유권문제와 관련한 일·중간 이해대립은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다. 일·중이 역내 역할증대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한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문제를 둘러싼 일·중간의 마찰은 지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일본이 중국에 대해 대규모 엔차관을 제공하고 중국의 WTO 가입을 적극 지지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도 일본과의 경제협력 확대 필요성을 갖고 있는 바, 일·중간 경제교류·협력은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5) 일·러관계

일·러간에는 정치·경제·군사 등 전분야에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다. 특히 양국이 북방영토문제 해결을 위한 고위급회담을 추진하고, 일본이 정경불가분 원칙을 완화함으로써, 일·러간에 유화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G-8 정상회의에서 옐친 러시아 대통령이 하시모토 일본 총리에게 정상회담 정례화와 정상간 핫라인 설치를 제의(6.20)하고, 일본에 대한 핵미사일 조준 해제방침과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의사를 밝혔다. 하시모토 총리는 신뢰구축, 상호이익 추구, 장기적 관점에서의 북방영토 해결 등 러시아에 대한 외교3원칙을 제시, 관계개선 의향을 표시(7.25)하였다. 나아가 러시아의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 하시모토 총리와 옐친 대통령은 "2000년까지 평화조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합의(11.2)하고, 일본이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에 적극 협력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로디오노프 러시아 국방장관이 일본 방문(5.16~18)을 통해 일·러의 군지도자 접촉을 정례화하고, 양국 군대편제·규모·훈련의 상호 통보에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 러시아는 극동지역 병력실태 및 1997년 군병력 20만명 감축계획이 포함된 문서를 일본에 전달하였으며, 현재 약 3,500명에 이르는 북방영토내 러시아군의 감축을 약속(5.17)하였다. 일본 구축함이 71년만에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96.7.26~29)한데 대한 답방으로, 러시아 태평양함대 소속함정 비노그라도프호가 103년만에 요코하마항을 기항(6.27)함으로써 일·러간에 군사적 신뢰·협력 움직임이 나타났다.

러시아는 극동지역을 개발하고, NATO의 동유럽 확대와 미·일 동맹관계 강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일본과의 관계증진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일본도 러시아와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북방영토문제 해결을 앞당기고, 중·러간 군사협력 강화 등 안보불안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북방영토 문제와 관련, 일·러는 북방 4개섬의 영토문제를 언급한 1993년의 「도쿄선언」을 바탕으로 2000년까지 평화조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의는 일본이 대러 경제협력, 러시아의 APEC 가입 지지를 약속함으로써 도출될 수 있었다. 옐친 대통령도 2000년까지 「옐친-하시모토 행동계획」에 따라 시장경제 활성화와 에너지개발 등의 분야에서 일본의 대규모 투자를 유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신의 권력기반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경제문제와 관련, 일·러는 1986년 이후 중단된 시베리아 목재 개발사업 재개(2.10)와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교류확대를 위한 상호 출장소 개설에 합의(5.24)하였다. 또한 일·러는 제2차 「경제공동위원회」에서 러시아의 대일 공적채무(20억불)를 파리클럽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합의(6.11)하였다. 또한 일본은 러시아에 총 80억 달러 규모의 이르쿠츠크 가스전 개발과 극동 삼림자원 개발에 협력하기로 약속(6.10)하였다.

1998년 일·러간에는 정상간 상호 교환방문이 예정되어 있고, 실무급 교류·협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점에서, 경제·군사 등 다방면에서의 협력이 내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영토문제에 대한 양국의 원칙적 입장차이가 앞으로도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 일·러가 2000년까지 평화조약을 체결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다만 일본이 에너지원을 확보하고 러시아 극동지역 주민들의 반일감정을 해소시키기 위해 이르쿠츠크 가스전 개발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보여, 일·러간 경제협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6) 중·러관계

1997년 중·러는 두차례에 걸친 공식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한층 심화시켰다. 중국과 러시아는 「국경병력 감축협정」을 체결하여 국경지역에서의 상호 신뢰를 강화하였으며, 「동부국경선획정조약」을 체결하여 약 4,300킬로미터에 이르는 국경선 문제를 대부분 타결짓게 되었다. 아울러 양국이 경제·과학기술 부문에서도 협력문제를 제도화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중·러간에는 비정치 분야에서도 협력관계가 증대되었다.

중·러간 정치·안보면에서의 관계 발전은 장쩌민의 러시아 방문(4.22~26)과 옐친의 중국방문(11.9~11)을 계기로 가능하게 되었다. 장쩌민의 방러시 중·러는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타지크스탄 등 중앙아시아 3국과 함께 「국경병력 감축협정」을 체결하여, 국경지역 100km 이내 지역에 각기 13만 4천명 이하로 병력을 감축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중·러는 상호 무력 불사용을 약속하였고, 국경지대 병력 주둔 상황과 관련한 자료를 교환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1960년대 이래 중·러간 분쟁요인으로 작용해 왔던 국경지역에서의 불신이 대폭 해소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중·러는 「공동성명」을 통해 특정 국가에 의한 세계질서 주도를 반대하며, 세계질서의 다극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표하였다. 중·러의 이러한 입장 표명은 NATO의 동유럽 확대 반대와 미·일동맹 강화 반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비록 중·러는 상호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가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있지만, 중·러의 「공동성명」은 미국의 패권을 견제하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옐친의 방중시 중·러는 세계질서의 다극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강조하는 동시에, 「동부 국경선획정조약」을 통해 동부지역 국경선 문제를 타결지었다. 흑룡강의 일부 미해결지역(黑瞎子島와 阿巴該圖洲渚)에 대해서는 영유권 분쟁을 접어두고 공동개발 하기로 하는 선에서 동부국경선 문제를 마무리 지었다. 동부 국경선문제의 해결은 중·러간 정치·안보적 신뢰를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중앙아시아 지역의 안정유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도 중·러간 신뢰를 증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중국은 신장(新疆) 지역의 위구르족 분리독립을 저지하기 위해 러시아의 협력을 필요로 하였고, 러시아는 러시아내 회교도에 대한 타지크스탄 반란군의 민족의식 고취를 방지하기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추구하였다. 양국의 이러한 안보적 필요성이 중·러간 국경지역 신뢰구축 노력을 강화하는 데 상당부분 기여하였다.

군사분야에서도 중·러간 협력추세가 지속되었다. 중·러간의 군사교류·협력은 로디오노프 러시아 국방장관의 방중(4.13~18), 위용포(于永波) 중국군 총정치부 주임(5.17~23)과 류화칭(劉華淸)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 부주석의 방러(8.23~28)를 통해 확대되었다. 중·러는 22억달러 상당의 SU-27 전투기 제조기술 이전문제를 논의하였으며, 국경선 지역에서의 군사적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심도있는 협의를 진행하였다.

경제·무역 부문에서 중·러간 교류·협력이 점차 증진되고 있으나, 러시아의 대내경제 침체로 양국간 교류가 의도하는 만큼 확대되지는 않았다. 1997년 4월 장쩌민의 방러시 중·러는 장쑤성(江蘇省) 핵발전소 건설, 싼샤(三峽)댐 건설과 시베리아지역 가스관 건설사업에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체르노미르딘 러시아 총리의 방중시(6.26~28)에는 제2차 「중·러 경제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여기에서 양국은 2000년까지 교역규모를 200억달러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양국간의 경제협력 합의는 1997년 11월 옐친의 중국방문시에 일부 가시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데 기여하였다. 중·러는 러시아 이르쿠츠크지역의 천연가스를 중국에 제공하기 위한 「가스관건설협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중국이 러시아의 APEC 가입을 지원하기로 한 점도 중·러간 경제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1998년에도 중·러간에는 정상과 총리의 상호 교환방문이 예정되어 있고, 외무장관의 회동이 계획되어 있다. 또한 양국간 제2차 「우호평화발전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있고, 서부국경선 획정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998년에도 중·러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또한 러시아가 아·태지역에 대한 외교공세를 강화할 것이라는 점도 중·러관계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러시아 극동지역내 중국인 불법이민자 문제로 중국인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불만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은 중·러관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중·러간 교역이 대부분 국경지역에서의 바터교역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양국간 교역규모가 대폭 확대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2. 한국의 주요 대외관계

가. 한·미관계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 4자회담을 성사시키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협력하였다. 그러나 대북 연착륙의 방향, 대북 식량지원, 대북 정보 공유 등에 있어서는 다소간의 이견이 노정되었다. 또한 통상문제에 있어서도 양국간에 갈등이 야기되었다.

한국과 미국은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4자회담 본회담을 성사(12.9~10)시켰다. 북한은 한반도 평화의 전제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와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였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주장에 대해 한반도 평화문제는 남북한과 미, 중이 협의·해결해야 하고, 대북 식량지원문제도 4자회담 본회담이 개최되어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북한의 4자회담 본회담 참가를 유도할 수 있었다.

한·미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통과(9.18)된 「대인지뢰금지협약」 가입을 거부하였다. 한국과 미국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뢰를 추방해야 한다는 국제여론에 동의하지만, 북한의 침략위협이 있는 한반도에서는 예외조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한반도에 대한 동 협약의 적용이 9년동안 유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제안이 수용되지 않자, 미국은 동 협약 서명을 거부하였다.

주한미군의 훈련장 반환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대해서는 한·미간에 일부 합의가 도출되었다. 미국은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동두천 미군 훈련장 606만평을 한국에 반환하기로 약속(11.10)하였다. SOFA와 관련, 미국은 형사재판관할권과 상소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의 입장과 이견이 있으나, 주한미군 영내 한국인 근로자의 노무조건 개선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북 식량지원과 미·북관계 개선 등 대북 연착륙 정책과 관련하여 한·미간에 이견이 노정되었다. 미국은 지역안정을 우선시하여 대북 식량지원을 조속히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던 반면, 한국은 북한이 외부에서 지원한 식량을 군사용으로 전용하지 않고 대남 도발행위를 중단해야만 북한에 대해 식량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미국이 부담하기로 하였던 대북 중유비용 일부를 한국에 전가하려 함으로써 한·미간에 마찰이 일어났다. 미국은 공화당 주도

의회의 반발로 북한에 제공할 중유의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게 되자, 1997년도 대북지원 중유대금 중 일부(400만달러)를 한국이 부담하도록 요구했다. 이는 한국과 일본이 대북 경수로공급 사업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고 미국이 대북 중유지원을 전담한다는 한·미·일간 양해를 파기하는 것이다.

북한의 노동 1호 실전배치문제와 관련, 한·미간에 이견이 있었다. 1997년 4월 서울에서 개최된 정보관계자 회의에서, 한·미는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를 갖춘 노동 1호 3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였으나, 미국은 한국의 견해와는 달리 북한이 노동 1호 7기를 추가로 배치했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의 이러한 주장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강조함으로써 한국으로 하여금 전역미사일방어 체제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미국산 미사일을 수입하도록 촉구하려는 데 목적을 두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한국은 러시아와 유럽제 미사일 구매를 통해 방공망을 강화하려 하였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미간에 마찰이 있었다. 한국은 기술이전에 비교적 호의적인 러시아에게 미사일 구매를 타진하였다. 그러나 코언 미 국방장관은 한국이 러시아제 SA-12 미사일을 구입할 경우, 한·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재고를 요청(4.8)하였다.

한·미간 통상마찰도 지속되었다. 미국은 한국에게 시장개방 확대를 요구하면서 적극적으로 한국시장을 공략하였다. 미국은 한국산 컬러 TV에 대해 반덤핑조치를 취하였으며(7.10), 미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산 자동차를 수퍼 301조 감시대상으로 지정(10.1)하였다. 한국은 미국이 취한 반덤핑조치의 부당성을 WTO 분쟁해결기구에 공식 제소하였다. 아울러 한국이 O-157균 감염을 이유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10.2)시킴으로써, 한·미간 무역마찰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한·미 양국은 1998년에도 대북 연착륙 유도를 위해 협력할 것이다. 한·미는 북한의 남침을 예방하기 위해 방위협력을 강화할 것이며, 한반도 평화문제 논의를 위한 4자회담 틀내에서도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할 것이다. 또한 한·미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대북 식량지원을 계속하겠지만, 지원된 식량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는데 협력할 것이다. 경제문제와 관련, 미국은 세계경제에서 한국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한국이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며, 그 대가로 시장개방 확대를 더욱 강도높게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 한·일관계

1997년 한·일 양국은 정상회담과 각료회담을 통해 정치·안보협력 문제를 논의하였으나, 종군위안부 문제와 신어업협정 체결문제 등으로 인하여 양국간에 갈등이 노정되었다.

김영삼 대통령과 하시모토 총리는 벳부(1.25~26), 뉴욕(6.26), 밴쿠버(11.24)에서 세차례에 걸쳐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양국은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한·일은 북한 핵문제, 4자회담,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반입문제 및 KEDO 문제에 대해 협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미·일 「신방위협력지침」에 대해 한국은 원칙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을 보였으나, 일본의 지역 안보역할 확대가 한국의 주권문제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천명(10.22)하였다. 일본은 일본 자위대의 한국 영해·영공내 작전활동 반대, 공해상의 한국 작전지역과 방공식별 구역내에서 작전시 사전협의, 한반도 유사시 민

간인 철수작전에 민간 수송수단 이용원칙 등의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한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종군위안부 문제는 한·일간에 많은 갈등을 야기하였다. 일본은 2차 대전 당시 강제로 위안부로 징용되었던 한국여성에 대해 민간기금을 조성하여 민간차원에서 개별적으로 보상하고자 하였던 반면, 한국은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 사과와 국가배상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한·일 외무부 아주국장회의시(9.19), 한국은 민간기금을 조성하여 종군위안부 문제를 간단히 해결하고자 하였던 일본에 대해 항의를 전달하였다. 또한 한국 국회여성특별위원회도 일본정부에 위안부문제에 대한 공개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11.11)하였다.

1996년 한국과 일본의 독자적 EEZ 설정 방침 발표 이후, 1997년 EEZ 설정에 따른 신어업협정 체결문제가 현안으로 부각되었다. 일본은 국제법에 위배되는 직선기선을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새로이 일본 영해로 규정한 지역에서 조업하는 한국어선을 불법적으로 나포하였다. 한국은 일본의 행위가 국제법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한국어선 나포행위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7.14)하였다. 한·일은 9차에 걸쳐 어업 실무자회담을 개최하였지만, EEZ 획정문제와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한 이해대립으로 신어업협정을 체결하지 못하였다.

1998년 한국의 금융위기 해소를 위한 일본의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한·일간 경제협력은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수입선 다변화정책 완화·철폐 등으로 일본상품의 한국진출이 확대될 것이며, 이에 따라 한·일간 무역불균형이 심화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한·일은 독도 영유권문제와 관련한 잠재적 갈등, EEZ 설정에 따른 신어업협정 체결문제 등으로 마찰을 겪게 될 것이며, 북·일수교 교섭과정에서 양국간에 이해대립이 표출될 수 있다.

다. 한·중관계

1997년 한국과 중국은 국교정상화 5주년(8.24)을 맞이하여 경제·통상분야 뿐만 아니라 정치·안보분야에서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였다. 연간 약 70만명에 이르는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교역규모도 200억 달러를 상회하여, 한·중간 경제적 상호 보완관계가 심화되었다. 또한 중국이 황장엽의 망명을 허용하고 4자회담에 건설적으로 참여하였는 바, 이는 한·중간 정치적 신뢰구축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였다.

중국이 황장엽의 망명을 허용함으로써 한·중간 정치관계가 한층 심화될 수 있게 되었다. 북한은 중국에게 북경주재 한국 총영사관에 망명을 신청(2.12)한 황장엽 북한 노동당비서를 북한에 인도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황장엽을 ① 국제관례에 따라, ②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과 ③ 북한의 이익을 고려하여 처리한다는 원칙을 밝히면서, 황장엽이 필리핀을 경유하여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반도 4자회담 준비과정에서 보여준 중국의 태도는 한·중간 정치·안보관계 증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김수한 국회의장 방중시 장쩌민 주석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힌(1.29) 바 있고, 첸치천 중국 외교부장도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한반도 4자회담 성사를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7.26)하였다. 또한 중국은 4자회담 예비회담에 차관보급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을 파견(8.5, 9.18)하였으며, 미·중정상회담시 4자회담을 통해 한반도에서 평화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미국에게 약속(10.29)하였다. 이와 같은 중국의 태도는 북한으로 하여금 4자회담에 임하도록 하는 데 어느 정도 압력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조선족문제와 관련한 이해대립으로 한·중간에 마찰이 일어

날 소지도 확대되었다. 중국은 8기 5차 전인대(3.1~14)에서 「형법」을 개정하여 국경관리 위해죄를 엄격하게 시행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중국 동북3성 지역에서 한국인의 활동이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었다. 또한 중국은 안승운목사의 납북을 주도하였던 북한 공작원 이경춘을 북한에 송환(7.28)하고, 중국내 한국 선교사의 불법 선교활동 시정을 촉구(8.1)함으로써 한·중간에 정치적 불신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을 드러내었다.

경제면에서 한국과 중국은 교류·협력을 더욱 확대하였다. 양국간 교역규모가 200억 달러를 돌파하여, 중국은 미, 일에 이어 한국의 3대 교역국 지위를 유지하였고, 한국은 중국의 4대 교역 상대국 지위를 유지하였다. 한국의 대중 투자도 1997년 6월말 기준 약 46억 달러(허가액 기준)로 급증하여, 한국은 중국의 7대 투자국으로 부상하였다. 아울러 한국과 중국은 「경제공동위원회」, 「환경공동위원회」, 「문화공동위원회」 등을 통해 경제를 포함한 비정치분야의 협력관계를 제도화하였다.

국제경제기구에서도 한·중은 협력관계를 강화하였다. 한·중은 중국의 WTO 가입을 위한 협상을 타결(8.26)하였다. 중국이 자동차 등 23개 품목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WTO 가입후 2~7년 내에 철폐하고 관세율을 대폭 인하하기로 함으로써, 한국은 중국의 WTO 가입을 지지하게 되었다.

「어업협정」 체결문제와 관련, 1997년 한·중은 다섯 차례에 걸쳐 실무회담을 개최하였다. 한·중은 연안국주의에 기초하여 황해상의 어업질서를 확립하기로 하는 데는 합의하였으나, 황해상의 영해범위 설정과 EEZ 설정문제와 관련한 입장차이로 인하여 「어업협정」을 체결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특히 중국이 황해상의 일부 암초를 기점으로 하여 영해기선을 선포함으로써, 한·중간에 영해범위 설정과 관련하여

마찰이 일어났다. 아울러 중국이 일방적으로 한국의 EEZ 남방 한계선 지역을 일본과 「일·중 공동수역」으로 선포(11.11)하였다는 점도 한·중관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

1998년 2월 25일 한국에서 신정부가 출범하고, 중국에서도 제9기 전인대(全人大)를 통해 국무원 총리와 외교부장 등이 새로운 인물로 교체될 예정으로 있다. 따라서 한·중은 신정부 하에서 상호 협력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최고 지도부간 상호 교환방문을 성사시키려 할 것인 바, 1998년 한·중 지도부간 교류·접촉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중국이 4자회담 본회담에 적극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여,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한 한·중간의 협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다.

한국이 IMF의 금융지원 여파로 긴축정책을 채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대중 투자는 다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중간 교역 증가 추세도 둔화될 전망이다. 다만 한국이 중국의 WTO 조기 가입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경제기구 내에서 한·중간 협력은 지속될 것이다.

라. 한·러관계

1997년 한·러간에는 정치적으로 동반자관계가 지속되었으며, 러시아 경제회복 추세로 한국기업의 대러 투자가 다소 확대되었다. 다만, 러시아가 최덕근 영사 사건해결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대북 관계복원 움직임을 보인 것은 한·러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예브게니 아파나시예프 러시아 외무부 아주 제1국장이 신임 주한 러시아대사로 부임(6.26)하였으며, 프리마코프 외무장관이 한국을 방

문(7.23~26)하였다. 양국 외무장관은 한반도 주변정세, 한·러관계 강화방안, 상호 관심사 등을 협의하고, 「청와대-크렘린간 핫라인 설치 협정」, 「양국 공관 신축부지 교환협정」, 「구러시아 공사관 부지문제 해결에 관한 협정」 등에 서명하였다. 외교공관 건축부지 문제와 관련, 양국은 공관 신축부지를 99년간 장기임대하는 형식으로 서로 교환하기로 하였다.

러시아는 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 복원 차원에서 한반도에 대한 외교공세를 강화하였다. 러시아는 순양함 「바랴그」호를 인천항에 파견(2.9)하였으며, 로디오노프 러시아 국방장관은 중국 방문중(4.13~18) 한반도문제에 대한 개입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하였다. 또한 로디오노프는 한반도 비무장지대내 남북한 군병력과 무기의 대폭 감축을 촉구하고, 주한미군을 중립국 병력으로 대체할 것을 제의하였다. 아울러 러시아는 「군수 및 군사기술협력협정」을 체결(11.20)함으로써 한국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였다.

러시아 외무부는 최덕근 블라디보스토크 영사 살해사건('96.10.1) 수사결과를 발표(10.30)하였는데, 최영사 사망원인에 대한 명확한 진상을 공개하지 않았다. 최영사 사건 규명에 대한 러시아의 미온적인 태도는 러시아의 대북 관계복원 정책에 따른 것이었다. 1997년 12월 러시아는 두차례에 걸쳐 북한에 대해 식량원조를 제공하여 북한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였다.

한반도 4자회담문제와 관련해서도 한·러간에 입장차이가 노정되었다. 한국은 한반도 평화문제를 궁극적으로 남북한 당사자가 해결해야 한다는 견지에서, 러시아와 일본의 참여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러시아는 제네바에서 개최된 남북한과 미, 중간 4자회담 본회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이해당사국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12.9)하였다.

러시아 국내경제의 회복과 정국안정 및 이에 따른 한국기업의 대러 투자관심 고조로 인하여, 한·러간 경제교류가 활성화되었다. 한국의 현대자동차는 우크라이나에 현지 조립공장을 건설, 1997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자동차 1만대 수출계획을 추진하였다. 러시아 브리야티아공화국 대통령 일행 방한시(4.12~18), 러시아는 한국기업의 대러 투자유치를 촉구하였다. 나아가 제1차 「한·러 경제공동위원회」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7.8)되었는데, 여기에서 나홋카 한국공단 착공, 차관상환, 모스크바 「한·러 과학기술정보교류센터」 설치, 러시아 첨단과학기술 전시회 및 세미나 서울개최, 이르쿠츠크 가스전 사업 한·중·러 3국 공동 추진방안 모색 등이 합의되었으며, 한국은 러시아의 WTO 가입을 지지하기로 하였다. 경협차관과 관련해서 한국은 원금과 이자 총액 18억 2,000만 달러 모두를 현물로 받기로 하였는 바, 1993년말까지의 상환분 3억 9,100만 달러는 1998년까지 농축우라늄, 알루미늄, 헬기 등 현물로 상환을 받고, 1994년 이후 도래분은 1999년부터 현물로 상환받기로 하였다.

1998년 한국은 러시아로부터 농축우라늄과 헬기를 제공받기로 되어 있어 한·러간 군용물자 교류가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가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립 50주년을 맞이하여 1961년의 북·러 우호협력조약을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조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러시아의 한국 일변도정책에 다소간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4자회담 본회담 진행과정에서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참여요구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도 한·러관계의 진일보한 발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경제위기 때문에 1998년에도 나홋카 한국공단 착공이 제대로 진행될지 의문시되며, 한국의 시베리아 천연가스관 건설사업 참여도 재원확보의 어려움으로 다시 답보상태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1998년 러시아가 APEC에 정식 가입하기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제경제기구 내에서 한·러간 협력은 확대될 것이다.

3. 한반도 통일환경

1997년 동북아 안보정세는 한반도 통일환경에 이중적으로 작용하였다. 동북아질서의 다극화 추세는 한국을 비롯한 지역국에게도 역할 확대 여지를 제공해 줌으로써 남북한에 의한 한반도문제 해결에 긍정적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북한의 미·북 평화협정 체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제네바에서 4자회담이 개최될 수 있었던 점이나 북한 신포지구내 경수로 건설사업이 한국주도로 추진될 수 있었던 점도 동북아질서의 다극화로 인하여 가능하였다. 아울러 역내국가들이 대내 경제발전을 위해 지역질서의 안정과 평화를 요구하였는데,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그러나 동북아 신질서 구축과정에서 미, 일, 중, 러 4개국간에 나타나고 있는 이해대립은 한반도 통일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에서 미·중간에 전개되고 있는 영향력 확대 경쟁은 한반도문제의 국제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한반도 평화문제 논의를 위한 4자회담에 미·중이 주역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도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1997년 하반기에 개최되었던 미·중, 중·러 및 일·중간 일련의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문제는 항상 주요 의제로 상정되었는 바, 남북한 주도에 의한 한반도문제 해결은 그 만큼 어렵게 되었다.

역내 정부차원의 다자안보대화가 활성화되지 못하였는데, 이 점도 한반도 평화통일에 유리한 여건을 창출하는 데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 일, 중, 러 4개국은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지역불안이 조성

될 수 있고, 통일한국 등장으로 역내 세력재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 4국의 부정적 인식은 일정 부분 통일한국에 대한 막연한 경계심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 아울러 영토문제를 둘러싼 한·중간 잠재적 갈등요인도 중국으로 하여금 한반도 통일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도록 하고 있다.

1998년에도 미, 일, 중, 러 4개국은 한반도의 급진적인 통일보다는 한반도 분단의 안정적인 관리에 우선 순위를 두게 될 것이다. 1998년 하반기에 중간선거를 치루어야 하는 미국은 4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문제를 논의하고, 북한과의 고위급 대화를 통해 북한의 연착륙을 유도할 것이다. 일본도 대북 수교교섭을 재개하여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이루면서, 대북 배상을 통해 북한에서 안정이 유지되도록 할 것이다. 중국 역시 두 개의 한국정책을 통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북한에서 사회주의체제가 유지되도록 최소한의 대북원조를 제공할 것이다. 동북아에 대한 영향력 복원을 모색하고 있는 러시아는 한국 일변도정책에서 남북한에 대한 등거리정책으로 한반도정책을 전환할 것이다. 주변 4국의 이러한 정책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에는 도움이 될 것이나, 한반도의 조기 통일에는 결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Ⅱ. 북한정세

1. 대내정세

가. 정치동향

북한은 1996년의 신년사격인 "붉은기를 높이들고 새해의 진군을 힘차게 다그쳐"란 제목의 「당보, 군보, 청년보 공동사설」을 통해 「붉은기 철학」을 김정일이 내놓은 새로운 혁명철학이라고 선전하였다. 1997년의 공동사설에서도 북한은 온 사회를 당의 붉은기 사상으로 일색화하자고 강조하였다. 이는 김일성 사망후 사상동요를 방지하고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창안한 정치구호이다.

그러나 황장엽 망명사건(2.12) 이후 북한은 붉은기 사상보다 주체사상의 강조로 복귀하는 경향을 보였다. 「중앙방송」 논설(2.18)을 통해 북한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감으로써 사회주의의 길을 우리식대로 승리적으로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로동신문」 정론(3.17)은 김정일을 '주체위업의 위대한 계승자'라고 하였고, 「로동신문」 논설(3.31)도 "주체사상은 우리식 사회주의의 사상적 기초"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북한은 김일성이 태어난 1912년을 원년으로 하는 「주체의 연호」를 제정하고 김일성의 생일인 4월15일을 「태양절」로 제정(7.9)하였다. 이는 김일성을 봉건왕조의 태조와 같이 자리매김함으로써 부자세습에 대한 정통성을 강화하고 유훈통치를 계속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1997년에도 북한은 김정일의 우상화·신격화에 심혈을 기울였다. 북한은 「김정일장군의 노래」를 보급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벌였으

며, 김정일 추대의 당위성을 선전하기 위해 자연현상까지 날조하였다. 조선기독교연맹은 담화(9.1)에서 김정일을 '하느님'으로 불렀으며, 김정일의 55회 생일을 맞아 백두산 천지에 55cm나 되는 산천어가 발견(「중방」 1.24)되고 백두산 밀영의 거대한 눈보라가 용이 승천하는 모습이었다고 주장했다.

1997년 북한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큰 사건은 10월 8일 김정일을 당총비서로 추대한 것이다. 김정일은 1974년 김일성의 후계자로 지명된 후 '80년대에 들어서는 실질적인 통치자로 군림하여 왔고 김일성 사망후에는 조선인민군 총사령관의 자격으로 북한을 통치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의 공식승계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김정일이 당총비서에 추대됨으로써 이제 북한은 최고사령관이 통치하는 변칙적인 통치행태를 종결짓고 정상적 체제로 환원된 것이다. 따라서 김정일은 과거와 달리 당총비서로서 경제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게 되었다.

북한은 김일성 사망후 카리스마 전이작업, 개방·개혁에 견딜 수 있는 체제확립, 주변 4강과의 관계 재정립 등 김정일의 공식승계를 위한 조건 등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그렇지만 경제회복, 식량난 개선, 장기 인민경제계획 수립 등에서는 여전히 부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이 당총비서직을 승계한 것은 '현재와 미래의 영도자'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세우기 위해 더 이상 승계를 연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정일의 추대는 평안남도 당대표회가 개최되어 김정일을 총비서로 추대하는 결정서를 채택(9.21)한 것을 시작으로 각 도, 직할시 및 인민군, 정무원 사무국, 사회안전부 등이 연이어 같은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당대표자회나 당대회가 개최되지는 않았으며, 당중앙위원회와 당중앙군사위원회의 공동명의로 김정일의 총비서 추대가 발표되었다.

이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총비서를 선출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무시한 것으로, 김정일의 총비서 추대가 당규약을 뛰어넘는 고도의 정치적 행사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통상 당대회나 당대표자회가 개최되면 새로운 정책방향이나 비전이 제시되는데, 북한이 당대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이러한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한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의 총비서 추대 4일전 평양방송(10.4)은 향후 북한의 노선이 과거 김일성노선과 "0.001mm"의 차이도 없을 것임을 강조하였다. 김정일 자신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2.17)에서 "우리는 절대로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요구하는 개혁·개방의 길로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와 주체사상을 고수하는 현체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의 총비서 취임을 계기로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김정일은 정권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자신에 대한 충성파를 승진시켜 전면에 배치할 것이다. 혁명 1세대들에게는 예우차원에서 명목적인 자리를 맡길 것이지만, 이는 그들이 실질적으로는 정치일선에서 물러나게 됨을 의미한다.

또한 김정일의 총비서 승계가 당중앙위원회와 당중앙군사위원회의 공동추대 형식을 취한 데서도 암시되듯이, 향후 김정일이 당과 군부를 직접 지휘통솔하는 체제를 제도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당총비서, 인민군 최고사령관, 당중앙군사위원장 겸직 조항이 제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 김정일은 1998년 4월경에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 제10기 최고인민회의 선거를 통해 주석직에 추대됨으로써 명실상부한 김정일 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다. 그리고 '80년이래 열리지 않았던 제7차 당

대회를 10월경 개최하여 제4차 7개년 경제계획을 발표하고, 경제청사진 및 과도적인 '전망목표'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식량난의 지속으로 사회질서의 이완이 가속화되는 등 북한체제는 전반적으로 불안정할 것이다.

나. 경제동향

북한은 「당보, 군보, 청년보 공동사설」(1.1)에서 1997년도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중심과업으로 '먹는 문제의 결정적 해결', '인민생활의 획기적 향상', '국토건설을 통한 부강조국의 토대 마련'을 제시하고, 과업의 달성을 위해 "농업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 방침을 계속 철저히 관철"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였다.

1996년 북한의 경제규모(명목GNP 기준)는 1995년보다 4% 감소한 214억 달러, 1인당 GNP는 47달러가 줄어든 910달러를 기록하였다. 북한의 1996년도 경제성장율(실질GNP 기준)은 -3.7%로 1990년 이래 7년째 감소하였다. 1997년에도 산업가동율의 저하와 수해 및 해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으로 이러한 감소 추세는 이어졌다.

1997년도 북한의 경제상황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농업무문에서는 6월과 7월의 가뭄 및 이상고온 현상으로 함경남도, 양강도, 평안남도, 강원도 지역의 농작물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으며, 8월 하순의 해일로 곡창지대인 서해안 지역(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남도)의 농경지가 바다물에 침수되어 곡물수확 감소가 불가피했다.

1995년과 1996년의 수해로 유실된 농경지의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1997년에도 자연재해가 발생한 데다가 비료, 농약, 영농기자재의 공급이 매우 부족했음을 감안할 때, 1997년 곡물생산량은 약 350만톤(1996년의 생산량은 369만톤) 내외로 추정된다. 북한의 연

간 곡물수요량은 약 670만톤 정도이고 예년과 같이 약 100만톤 정도를 해외로부터 도입(국제사회의 지원 및 수입)한다고 가정하면 북한의 1998년도 곡물부족량은 200만톤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 북한의 국민총생산 및 경제성장율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경상GNP(억달러)	231	229	211	205	212	223	214
1인당GNP(달러)	1,064	1,038	943	904	923	957	910
실질경제성장율	-3.7	-5.2	-7.6	-4.3	-1.7	-4.5	-3.7

자료: 한국은행, 「북한 GDP 추정결과」, 각년도; 통일원, 「북한의 제3차 7개년계획 종합평가」(1994).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부문은 1997년에도 에너지 및 원자재 부족, 수송부문 애로, 근로자 사기 저하 등의 요인이 지속됨에 따라 산업가동율이 30%에도 못미치는 저조한 양상을 보였다. 광공업부문의 부진 요인중에서 특히 심각한 것은 에너지부족이다. 북한은 1996년의 홍수로 안주지구 탄광들이 침수되어 석탄생산에 큰 지장을 받고 있으며, 이 때문에 화력발전소가 거의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의 석탄생산은 '90년대에 들어와서 지질탐사사업의 부진과 더불어 채굴장비가 노후화되고 갱도가 깊어지는 등 채탄여건의 악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북한 에너지원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석탄의 1997년 생산량은 2,100만톤 정도로 예상되며, 이는 1991년 3,315만톤의 약 63%에 불과한 것이다. 한편 1997년의 가뭄도 북한의 수력발전량 감소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전력사정은 더욱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부문에서는 1997년이 완충기의 연장년도로서 그동안 추진해 온 각종 경제건설사업을 마무리지어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재정 악화 및 건설자재 부족으로 대부분의 경제건설사업이 사실상 중단되고 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금수산기념궁전 성역화 사업 등 정치사상적 상징물의 건설에 치중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제건설은 청진항 부두의 부분 확장, 금강산 청년선(101.5km) 철도의 개통 등에 머무는 등 극히 부진하였다.

북한의 대외무역은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된 이후 계속 감소추세에 놓여 있다. 1995년 북한의 대외무역 총액은 20.5억 달러였으나 1996년에는 19.8억 달러로 줄어들었다. 1997년에도 생산능력 저하 및 외화부족 등 구조적인 위축현상이 지속되어 1996년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1996년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1997년 상반기 북한의 대중국 수출(4,282만 달러)과 수입(2억 5,241만 달러)은 모두 증가하였으나, 대일본 교역에서는 수출(152억엔)이 증가한 반면 수입(96억엔)은 감소하였다.

<표 2> 북한의 1990년대 대외무역 규모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무역규모(억달러)	47.2	27.2	26.6	26.4	21.1	20.5	19.8
수 출	19.6	10.1	10.2	10.2	8.4	7.4	7.3
수 입	27.6	17.1	16.4	16.2	12.7	13.1	12.5

자료: 한국은행, 「북한 GDP 추정결과」, 각년도.

남북한간 물자교역은 1995년 2억 8,729만 달러였으나 1996년에는 2억 5,204만 달러로 12.3% 감소하였다. 그러나 1997년에는 교역량이

다시 늘어나 3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남한은 중국, 일본에 이어 북한의 3대 교역상대국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식량난 해결과 경제발전을 위한 개혁지향적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부문에서는 1996년부터 농장원들의 노동의욕을 높이기 위해 일부 협동농장에서 기존의 분조관리제를 개선한 '새로운 분조관리제'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1996년도의 경험에 기초하여 1997년에는 정무원 결정에 따라 '새로운 분조관리제'를 전국의 모든 협동농장과 국영농장에 도입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표 3> 분조관리제의 변화

	1966~1995년	1996년 이후
분조구성	농장원들의 능력과 요구를 고려하여 노·장·청을 배합하여 구성(10~25명)	주로 가족 및 친척 단위 위주로 구성(7~8명)
생산계획	매년 국가의 생산목표에 따라 각 농장들에 목표량을 할당	지난 3년간의 평균수확고와 '93년 이전 10년간의 평균수확고의 평균치
처분권	초과분은 국가가 수매 (예: 쌀 1kg 60전, 옥수수 1kg 50전)	초과분은 현물로 농장원(분조)에게 분배되어 자유롭게 처분

자료: 「조선신보」, 1997.7.16.

또한 북한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주최 세미나(11.24)에서 농산물 가격 자율화, 소규모 농산물시장 활성화, 단위작업반에 대한 보너스제도, 과학영농달성 등 4개항의 농업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국제기구의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선전적 차원에서 발표된 성격이 강하므로 실제 시행될지는 미지수이다. 만약 이 방안이 실행된다면 향후 쌀, 보리 등 기본곡물을 제외한 농산물

가격이 어느 정도 자율화되는 등 농업부문에서의 변화 촉진이 예상된다.

그리고 북한은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외화와 바꾼 돈표' 사용 폐지, 달러 환율조정, 기업에 대한 독립채산제 적용 등 일련의 주요 결정들을 채택하였다. 이로써 6월 1일부터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일반화폐만이 사용되며, 외화는 일반화폐와 직접 교환되게 되었다. 지대내에서 외화의 교환비율은 US 1$=200원(북한 원)이며, 향후 교환비율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뿐만 아니라 지대내 공장과 기업소는 국가계획관리체제로 부터 독립하여 자율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게 된다. 이와 함께 북한은 지대내 주민들에게 자영업을 허용하고 원정리에 중국과 공동시장을 개설(6.17)하였다. 아울러 북한은 경제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남포 및 원산을 보세가공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2~3년 사이에 북한은 관광산업의 개발 우선순위를 앞당겨 왔다. 경제난이 악화되고 외화부족이 심화되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관광업에 주력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4대 관광지구(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개발구, 희령·온성 중심의 두만강지구, 신의주 중심의 압록강지구, 함경북도 칠보산지구)를 설정하고 이를 집중 개발하겠다고 발표하였다(4.15). 북한은 연간 약 1백만명의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관광산업을 대규모로 육성할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농업부문과 나진·선봉지대에 대한 시장경제원리의 도입 및 실험은 타부분·타지역으로 파급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것이 조만간 전반적인 경제구조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종합적으로 보아 1997년에도 자연재해와 농업원자재 공급난 등의 요인으로 식량사정은 한계에 이르렀으며 생필품 공급 감소로 주민생

활이 극도로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사회 전부문에 걸쳐 근로자의 노동의욕 감퇴, 직장 이탈 등 당국의 통제력 저하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비공식부문 경제가 확산되었으며 계획부문의 물자가 불법적으로 암시장에 유입됨으로써 공식 배급망의 물자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다.

1997년 북한경제는 전반적으로 1996년도 수준 이하로 쇠퇴하고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비공식부문 경제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북한당국은 체제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비공식부문 경제의 확산을 묵인하고 농업부문과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부분적인 정책변화를 시도하였다.

1998년 북한은 경제부문에서 인센티브 및 분조관리제의 실질적 개선, 비공식부문 양성화, 농민시장 활성화,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내 시장경제원리 확대, 원산·남포 등 보세가공 수출지역 지정, 관광산업 육성 등 새로운 조치들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정치체제의 경직성으로 근본적인 경제개혁 조치의 도입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 사회상황

김정일이 당총비서직을 승계한 1997년 북한에서는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하는 선전선동과 사회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상교육이 더욱 강화되었다. 신년 공동사설에서 "인민들이 풀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사회주의를 고수하겠다"며 사상투쟁을 더욱 강조한 북한은 1997년을 고난의 행군과정의 마지막 연도로 규정하고 "붉은기 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동시에 이를 실천하기 위해 집단주의를 더욱 강화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북한은 1997년에도 특히 청년층의 사상교육에 관심을 기울였다. 신년 공동사설에서 당·군대와 더불어 청년동맹을 3위일체의 한 요소로 규정하였고 청년들은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이며 최고사령관의 예비전투부대, 별동대"로서 김정일을 "결사옹위하는 총폭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청년들에 대한 김정일의 관심은 청년층과 관련된 각종 행사에 김정일이 직접 참여한 데서도 잘 드러난다. 김정일은 청년기동선전대원(1월)을 접견하고, 청년협주단 경축공연(2.4)을 관람하였으며, 김일성대학 창립 51주년을 맞이하여 김일성대학을 방문, 농구경기를 관람(10.1)하였다. 그리고 김정일 문헌집 「주체의 청년운동과 청년들의 임무」가 발간(8.11)되었다.

청년층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은 역으로 청년층이 사상적으로 동요가 적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년동맹에서 이탈한 맹원들로 하여금 '청년돌격대'를 구성, 각종 건설현장에 투입하였던 북한은 9월에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의 전 맹원을 대상으로 맹원증대사업을 실시하였다.

김일성에 대한 우상화는 1997년에도 지속되었다. 9월 9일부터 시작한 주체 연호의 사용과 김일성 생일의 '태양절' 지정은 우상화 작업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각종 출판보도물·문서·증명서·건축물·상표·우표 등에 주체 연호의 사용이 의무화되었다. 그렇지만 김정일의 당총비서 취임을 계기로 김정일과 그 일가에 대한 우상화 작업도 더욱 강화되었다. 「제1회 김정일화 전시회」(2월)가 개최되었으며 '김정일 장군의 노래'가 제정(4.9)되었고, 평양에 김정일 혁명사적 표식비 및 현지 말씀판이 건립(11.4)되었다. 특히 김정일의 당총비서 취임 이후 김일성 가계를 우상화하는 5개의 각종 우상물이 잇달아 건립되었다.

사상적 통제와 국가보위부 및 사회안전부 등 국가기구에 의한 물

리적 사회통제와 함께 1997년에는 보상체제를 활용한 사회적 통제가 강화되었다. 1월에 문예봉의 80세 생일상을 김정일이 차려준 것을 시작으로 주요 인물들과 보통사람들에게까지 김정일의 생일상 차려주기 행사가 계속되었다. 또한 북한은 「피바다가극단」 소속 10여명의 예술인들에게 '공훈칭호,' '훈장'을 수여하였는데, 과거에는 주로 인민배우·공훈예술가·공훈배우 등의 칭호를 준 반면 1997년에는 국기훈장·노력훈장 등 비교적 높은 등급의 훈장이 수여되었다. 이와 함께 '김정일의 선물'을 전달하는 행사를 개최하거나 각종 단체와 기관에 김정일 명의로 '감사'를 보내는 경우가 빈발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적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인덕정치'라는 미명하에 주민들에 대한 선무작업을 병행하였으나, 식량난으로 인한 배급체제의 와해는 기본적인 사회통제 체제를 약화시키고 있다. 중국과의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북한이탈 주민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남한으로 귀순하는 북한주민의 수도 1996년의 51명에서 79명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과거에 비해 가족 단위와 황장엽 당비서, 장승길 이집트 대사 등 고위층의 탈북자가 많아지고 있는 점은 북한 사회통제 기제의 약화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은 1997년에 끝나는 '고난의 행군기간'을 대체하여 1998년부터는 '사회주의 강행군'을 실시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으나, 배급체제의 회복과 같은 근본적인 생활조건의 개선없이는 주민들의 사상적 동요를 억제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나진·선봉지역이나 신포지역에서 자본주의를 접하는 주민들은 엄격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적 사조를 전파하는 중요한 매개자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이미 사상적 동요가 적지 않은 청년층은 잠재적으로 북한체제의 변화를 추구하는 집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

라. 군사동향

1997년 북한의 군사동향은 1996년과 마찬가지로 2가지 특성을 띠고 있다. 첫째, 내부체제의 공고화를 위한 수단으로 외부, 특히 한국과 미국의 군사위협을 강조하면서 내부 군사동원체제 강화를 독려한 점과, 둘째,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군사력 증강 노력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비무장지대(DMZ)에서 우리측의 3차례에 걸친 경고를 무시하면서까지 북한군 14명을 월경(7.16)시켜 우리측의 경고사격과 그들의 대응사격으로 군사적 긴장 분위기를 야기했다. 이같은 북한의 군사적 긴장조성은 여러 가지 목적을 지녔던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은 미국을 겨냥한 의도적인 행위로 미국이 그들을 계속 지원하면서 달래는 것이 최선책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된다. 둘째는 기존 정전협정체제 무력화 상황을 부각시킴으로써 미국과의 장성급 회담 개최를 유도하고자 하는 의도도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셋째는 식량난, 경제난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평·불만을 무마시키고 내부체제를 결속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북한은 정부 비망록(9.12) 형식으로 한국의 방위비 증액과 무기구매를 비난하는 한편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함으로써 대남적개심 고취를 통해 체제결속을 도모하고자 했다. 북한은 이 비망록에서 한국은 "만성적인 재정난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하면서도 군사비만은 엄청난 비율로 늘이고" 있고, 자신의 "종심과 요충지역에 대한 선제기습 타격과 공격작전을 위한 최신 해·공군 장비들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동시에 한국이 "대규모 전쟁연습을 벌여 조선반도 정세를 더욱 긴장시키고 있다"고 하면서 한반도의 전쟁 분위기를 과장·선전했다.

이외에도 김영춘 총참모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 4돌행사에서 "미제와 남조선 괴로도당이 매일같이 발광적으로 벌이고 있는 전쟁 소동으로 인하여 북침 격발기는 지금 앞당겨진 상태에 있다"고 하면서, "정치사상을 강화하여 모든 군인들을 수령결사옹위정신, 총폭탄 정신, 자폭정신으로 철저히 무장한 최고사령관의 제일 근위병, 제일 결사대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김정일에 대한 북한 전주민들의 충성을 촉구했다.

한편 북한은 경제난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군사력증강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170/240mm 방사포 각각 350여문과 250여문의 전방지역 배치, SCUD미사일 증강배치, 노동1호 미사일의 작전배치, 대포동1·2호 엔진시험 준비 등이다. 해군은 기습상륙을 위한 연안작전용 소형 잠수함, 공기 부양정 등을 추가 건조 배치했으며, 공군은 MI계열 신형 헬기를 도입하고 AN-2기를 추가로 작전 배치했다.

북한은 현재 남한의 동원능력을 마비시킬 수 있는 10만여명의 특수전 부대를 운용하고 있다. 이 특수요원들은 남한의 후방에 침투해서 테러, 습격, 폭파, 교란활동 등을 감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시 남한전역의 동시 전장화전략에 적극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이 현재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있는 소형 잠수함, 공기 부양정, AN-2기 등은 특전대원들을 침투시키는 데 유효하게 이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 밖에 북한의 전쟁준비태세는 인민군의 훈련활동에서도 발견된다. 북한은 식량난으로 인해 느슨해진 군대·사회의 기강을 바로잡고, 탈북자 증가와 같은 일탈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정치학습과 군규율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동시에 군단급 지휘체계 점검과 후방 2개 기계화군단의 기동훈련 및 해·공군의 전술훈련이 증가했다. 특히

남한의 팀스피리트 훈련과 같은 대대적인 훈련이 없는 상황에서도 북한은 민간분야의 전시대비 훈련에 중점을 둔 전국규모의 민·관·군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는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일정수준의 동원능력과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고자 하는 기도이다.

한편 군사외교에서는 인민무력부 부총참모장 겸 전투훈련 국장인 중장 이봉죽을 단장으로 한 친선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6.10~17)해서 중국의 주요 군부 인사와 접촉하고 군부대를 방문했다. 북한 대표단의 방중은 연례적인 것으로서 양국 군대의 전통적인 우호협력 관계를 재확인하는 한편 군사교육 및 훈련문제 등 양국간 실질적인 군사협력 관계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북한 대표단의 방중은 최근의 한·중간 군사협력 관계 강화에 대한 자제를 요청하는 기회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핵 및 미사일개발 문제를 외교적 지렛대로 삼아 대미 군사적 접근을 강화했다. 즉 북한은 핵문제와 미사일개발 문제 협상을 구실로 미국과 직접적인 군사대화의 폭을 넓혀 나가고자 했다. 북한의 직접적인 대미 군사대화의 목적은 미군의 한반도 주둔 명분을 약화시켜 궁극적으로는 미군철수를 유도하고자 하는 데 있다.

1998년 북한은 대내적인 체제안정을 위해서 미국과 남한의 군사적 위협을 계속 강조할 것이다. 김정일이 '믿는 것은 오직 군대' 뿐이라고 언급한 사실을 고려해 볼 때, 군사력 강화를 위한 제반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특히 북한은 1998년 남한의 신정부 출범과 IMF체제하에서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악용하여 남한사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전략을 쓸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적인 군사협상을 강화해서 한·미관계에 혼선을 초래하게 하거나, 군사분계선 주변에서 무력시위를 산발적으로 벌임으로써 남한사회의 총체적 혼란을 도모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주요 대외동향

가. 북·미관계

1997년 북한과 미국은 「기본합의문」 이행의 틀 속에서 준고위급회담, 미사일협상, 미군유해 송환 협상, 경수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4자회담 개최를 위한 협의를 진행시킴으로써 양국관계를 일보 진전시켰다. 클린턴 정부 집권 2기에 들어선 미국은 북한의 핵동결 및 한반도 전쟁예방을 위해 북한의 4자회담 참여 유도, 정전협정 위반에 대한 적극적 대응, 정치·군사적 대화접촉 등을 시도하였고, 북한은 경제지원 확보와 다변적 대미 접근을 추진하였다.

양국간 정치적 접촉은 북한의 4자회담 공동설명회(3.5, 뉴욕) 참가와 준고위급회담(3.7), 그리고 김계관 외교부 부부장의 워싱턴 방문(3.8~13)으로 시작되었다. 준고위급회담에서는 미군유해 송환, 미사일 비확산, 연락사무소 설치 문제 등이 논의되었으며, 쌍무회담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간 정치·군사적 접촉은 4자회담 공동설명회 → 2차례의 후속협의(4.16~21, 6.30~7.2) → 3차례의 예비회담으로 발전되었다.

1차 예비회담(8.5~7, 뉴욕)은 북한이 '선 150만톤 식량지원, 후 회담개최'와 주한미군 철수 및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한 반면, 한국과 미국은 '선 회담, 후 지원' 입장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에 대한 문제를 의제로 제시함으로써 결렬되었다. 2차 예비회담(9.18~19, 뉴욕)도 북한이 기존 요구를 반복하는 바람에 성과없이 끝났다. 그러나 북한은 비밀접촉(10.21)을 통해 기존 주장을 철회하는 대신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 등 전반적 관계개선을 요구했고, 3차 예비회담(11.21~22, 뉴욕)에서는 12월 9일 제네바에서의

본회담 개최에 합의하였다.

연락사무소 개설과 관련하여, 미국은 평양에 임시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문제를 타진(3.1)하였으나, 북한은 조기개설이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미사일회담과 관련하여, 1단계 2차회담(6.11~13, 뉴욕)에서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가입과 미사일개발 중단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미사일개발이 자위권 차원의 문제이며 MTCR 가입도 자신의 판단소관으로 주장하는 한편 미사일수출 포기 대가를 과도하게 요구함으로써 협상이 결렬되었다. 3차회담은 뉴욕에서 열릴 예정(8.27)이었으나, 장승길 주이집트 대사 일가의 미국망명(8.26)으로 인해 북한이 회담자체를 일방적으로 취소하여 무산되었다.

그러나 미군유해 발굴·송환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양국은 유해협상(5.4~9, 뉴욕)을 통해 3차(1차 7.1~8.3, 2차 8.23~9.11, 3차 10.4~23)에 걸쳐 유해공동발굴 작업을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이행하였다. 북한은 10월 발굴작업에서 전례없이 미군 참전용사단체 대표와 실종미군 가족 그리고 「USA Today」지 및 CBS 기자들의 동행을 허락하였다.

북한의 핵동결과 대북 중유 제공 및 경수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미국은 폐연료봉 봉인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영변에 국무부 실무담당자들을 상시 파견하고 있고, 북한에 중유를 계속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공화당 주도 의회의 반발로 대북 중유제공 비용의 분담(한국에 400만 달러, 일본에 1,000만 달러)을 요구하는 등 다른 나라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경수로 부지 착공식(8.19) 이후 경수로 건설에 드는 비용이 52억 달러로 추정되자, 미국은 KEDO 참여국들의 분담을 유도하고 있다.

미국무성은 북한을 국제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4.4)하였으며, 대북

식량지원계획을 발표(4.15)하면서 북한의 군비축소를 촉구하였다. 북한군의 비무장지대 침투사건(7.16)과 대성동 주민 납치사건(10.17)이 발생하자, 미국방부는 이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하고 북한에 즉각 항의하였다. 미 상원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시 미국의 대북 경수로 공급지원 중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외원조법 수정안을 압도적 지지로 통과(7.17)시킴으로써 경수로공급 지원에 제동을 걸었다.

미·북 경제관계와 관련, 미국은 적극적 대북 연착륙정책 기조에 따라 식량지원을 지속하였다. 미국 정부는 미공법 480조 II 긴급식량원조 항목에 총 5,200만 달러 규모의 곡물을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무상 지원하였다. 또한 미국 민간구호단체들도 의약품 지원에 나서, Americares는 800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을 미국 민간비행기로 공수(9.10)하였다. 미국 민간항공기가 북한에 들어간 것은 1949년 이래 처음이며, 이는 미재무부가 민항기의 북한영공 통과를 허용(4.7)한데 따른 것이다.

또한 미국 정부는 미국내 북한자산 동결 해제를 위한 조사착수를 결정(9.17)하였다. 그리고 미 스탠튼 그룹은 나진·선봉의 승리화학정유공장에 1,300만 달러를 투자하기 위해 미 재무부의 승인을 얻어 정유공장 재가동의 타당성을 조사했으나 투자는 실현되지 않았다.

이밖에 양국간 인적 교류와 세미나를 통한 대화접촉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미 오리건주와 북한은 인적 교류를 비롯 무역·문화·정보 등 각 부문의 교류와 친선강화를 골자로 하는 합의문에 조인했다. 카터 재단은 북한 노동당 농업위원회 소속 고위간부와 학자 등을 초청해 농업기술 세미나(8.31~9.8, 조지아대)를 개최하였고, 워싱턴(8.19) 세미나에서는 함경남도 단천지구와 금덕지구의 아연과 납, 마그네사이트 합작개발 투자문제가 논의되었다.

1998년 북한과 미국은 「제네바 기본합의문」에 규정된 사항인 핵동

결, 중유 제공 및 경수로건설 사업, 연락사무소 개설 등을 실천해 가는 한편 4자회담과 양자회담을 병행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북·미 현안에 관한 해결을 모색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추가적인 대북경제제재 완화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양국간 경제관계는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나. 북·중관계

1997년 북·중간에는 우호협력관계가 지속되었다. 북한내 사정으로 인하여 북·중간 최고 지도자의 교환방문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북한에 대한 중국의 다방면적인 지원으로 북·중간 유대관계가 유지되었다. 다만, 황장엽 망명사건 처리와 4자회담문제로 상반기에는 다소간의 갈등이 노정되기도 했다.

북·중간에 우호협력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막대한 지원 때문이었다. 1997년 중국은 북한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15만톤의 식량을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북한의 식량난 해소에 큰 도움을 주었다. 중국은 북한 주재 완용샹(萬永祥)대사를 통해 쌀 1만톤과 옥수수 6만톤 등 총 7만톤의 식량지원 방침을 밝힌 바(4.12) 있고, 류싼짜이(劉山在)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부부장의 평양 방문시 8만톤의 식량을 무상 제공하기로 약속(7.14)하였다. 이는 공개된 지원분에 불과할 따름이며, 물물거래나 비공식 무역을 통해 거래되는 부분을 포함할 경우 연간 100만톤 이상의 식량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반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북한과 중국은 국경무역 활성화 조치들을 취하였다. 북·중은 나진·선봉과 길림성 훈춘을 연결하는 「원정-권하다리」 통행의식을 가졌는데, 이로써 제3국인들이 북한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초청

장만으로 중국에서 나진·선봉 지역을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양국은 두만강지역 국경무역시장인 「조선 나진·선봉시 조·중공동시장」을 개장(6.17)하고 중국인민폐, 북한화폐, 달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장 목적은 국경무역을 제도화하여 밀무역 등 탈법행위를 막고 수출입량을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과 중국은 외교·군사 부문에서도 친선관계를 재확인하였다. 김정일은 덩샤오핑(鄧小平) 사망시 중국의 쟝쩌민 주석에게 조전을 발송하여 애도의 뜻을 표명(2.20)하였으며, 중국 정부는 김일성 생일행사(4.15)를 전후하여 평양에 친선대표단을 파견하였다. 또한 김정일은 중국 공산당 15차 전국대표대회(9.12~18)와 당 15기 1중전회시(9.19) 쟝쩌민의 당총서기 및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재선 축하전문을 보냈다. 아울러 중국의 쟝쩌민 주석은 김정일의 총비서 승계시(10.8) 상호 우호협력관계의 강화와 발전을 약속하였다.

북·중간에 우호협력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는 양국 군부간 유대관계를 들 수 있다. 북한 인민군 친선참관단(단장: 부총참모장 이봉죽 중장)이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 중앙군사위 부주석 장완니엔(張萬年)과 회담(6.12)하였으며, 중국 인민해방군 총후군부 정치위원 죠우쿤런(周坤仁) 중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인민해방군 친선참관단이 방북하여 북한 인민군 총정치국장 조명록과 담화했다. 또한 왕지잉(王繼英) 중장을 사령원으로 하는 조·중우호협력상호조약 체결 35주년 기념 중국 해군함단, 장텐뺘오(張天杓) 총정치국 부주임을 단장으로 하는 인민해방군 정치일군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하여 군사협력문제를 논의하였다.

다만 황장엽 북한 노동당 비서의 망명신청(2.12)으로, 북·중간에 다소간의 긴장이 있었다. 중국은 「황장엽사건」을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여 처리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황장엽이 제3국(필리핀)을 거쳐 한국

에 망명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데, 이러한 중국의 조치는 북한에게 불만스러운 것이었다.

4자회담과 관련해서도 북·중간에 입장차이가 있었다. 북한은 4자회담을 북·미접촉 중심으로 운영하고자 「3+1회담」을 제의(4.20)하였다. 「3+1회담」은 중국을 배제하고 남북한과 미국간에 한반도 평화구축 문제를 논의하자는 것이었다. 따라서 북한의 이러한 제의는 한반도문제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중국의 이익에 부합될 수 없었다.

그러나 4자회담과 관련한 북·중간 입장차이는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완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중국은 장쩌민 주석의 방미 직전 북한에 외교부대표단을 파견(10.25~11.1)하여 미국과 논의할 사항들을 사전 통보하였다. 또한 중국은 제네바 4자회담 본회담시에도 '관계각측간 관계개선'을 요구하는 등 북한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는 자세를 보였다. 이로써 국제무대에서 북·중간 우호협력 분위기가 복원·강화될 수 있게 되었다.

1998년 북한은 정권수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중국과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이다. 중국에서 3월 새로운 지도부가 등장하게 되어있는 바,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중국의 신지도부와 인적 유대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중 교류·접촉을 강화할 것이다. 특히 김정일은 국가주석을 승계한 후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

북·중간 우호협력관계는 북한의 대미·일관계가 개선되더라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를 바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식량과 에너지를 계속 지원할 것이고, 북한도 대미·일관계를 개선하더라도 부족한 식량과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중국의 지원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 북·일관계

1997년 북·일 관계는 상반기 일본소녀 납치의혹 사건(13세의 여중생인 요코다 메구미가 배드민턴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실종된 사건)의 이슈화로 인해 악화되었으나, 하반기 수교회담 예비회담과 북송 일본인 처 고향방문으로 인해 다시 관계개선의 실마리를 찾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외교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1997년 연초부터 일본에게 전후문제 청산회담을 촉구(1.10)하고, 일본의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시도를 비난(2.13)하였다. 한편 일본에서도 북한의 일본소녀 납치의혹과 각성제 밀반입 문제가 대두되면서 양국관계는 악화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대미관계 개선과 당면한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은 대북 관계정상화를 통한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확보와 정치대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수교회담 재개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양국은 외무성 과장급 비공식접촉(3월 이후 4차례, 북경)을 계속하여 수교회담 결렬('92.11) 이후 4년 9개월만에 수교협상 재개를 위한 예비회담(심의관급 회담, 8.21~22)을 북경에서 가졌다. 동 회담에서 북한은 북송 일본인 처의 고향방문 및 일본인 납치문제 등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일본은 UN을 통해 북한에 식량을 원조하기로 약속하는 한편 조속한 시일 내에 북경에서 적십자회담을 개최, 실무적 문제를 협의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이후 양국은 적십자사 연락협의회 제1차 회의(9.6~9, 북경)에서 총 1,831명에 달하는 북송 일본인 처의 고향방문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제1진 15명의 고향방문(11.8~14)이 성사되었다. 또한 일본 여 3당(자민·사민·신당사키가케) 대표단이 방북(11.11~14), 노동당과 수교교섭 재개 및 일본인 처 고향방문 지속 추진에 합의하는 한편 일본

인 납치 의혹에 관해서도 북한으로부터 일반 행방불명자로 조사하겠다는 양보를 얻어냈다. 회담 당시 북한측은 '일본총리 하시모토 류타로 각하'라고 최대 경어를 사용하는 등 대일관계 개선에 열의를 보였으며, 이에 하시모토총리도 "북한측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일본 정부도 새로운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11.14)함으로써 대북관계 개선의 적극적 추진을 시사하였다.

한편 일본은 대북원조와 관련하여, 주변 국가들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1996년 중반 이래 인도주의적 지원을 거부해 왔다. 일본은 인도적 지원의 선행조건으로 북송 일본인 처의 고향방문, 일본인 납치의혹 해소 및 마약 밀반입 문제 등의 해결을 요구했다. 그러나 8월 회담에서 일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지자, 일본은 북한에 대한 2,700만 달러 상당의 식량지원을 선언(10.9)하였으며, 국제적십자사 및 기타 기관들에 대한 추가 지원도 약속하였다.

이를 전후하여 일본정부는 지방의회내의 「일·조의원연맹」을 비롯한 각종 친북단체 대표들의 방북을 허용하였고 북한도 지금까지 관계가 밀접하지 않았던 지방의 정치가, 농업관계자, 학자 등 각계 요인들을 초청하였다. 이는 북한이 일본 국민의 대북 인식이 다소 전환되는 것을 배경으로 북한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여 일본 정부의 식량지원 및 수교교섭 재개를 유도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1998년 양국관계는 수교회담의 재개를 매개로 진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양국은 수교교섭 재개와 일본인 처 고향방문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통해 계속 접촉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일본인 납치의혹 및 배상문제 등 교섭타결의 걸림돌에 대한 타협이 모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교섭타결은 배상문제 등에서의 커다란 견해차이와 한·미의 압력 등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라. 북·러관계

1997년 북한과 러시아는 1996년의 관계개선 추이를 이어갔다. 북·러관계 개선은 경제분야의 협력관계 복원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1996년 북한과 러시아는 「투자장려보호조약」('96.10.18) 등 4건의 조약을 포함한 다양한 협정을 통해 경제분야의 관계개선을 꾀했는데, 이와 같은 노력은 1997년에도 지속되어 「여행협정」(1.24), 「과학기술협력의정서」(4.14), 「이중과세 방지협정」(9.26) 등이 체결되었다. 또한 양국은 교역량을 구소련시기 수준으로 완전 회복시키기로 합의(9.16)하였고, 북한의 고려민항이 평양-블라디보스토크간 운항을 개시(8.4)했다.

정치분야의 경우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표단이 러시아 하원대표단과 회담(4.30)한 데 이어 러시아연방 국가회의 대표단이 방북, 국회회담을 개최(6.6)하여 양국간 경제·기술협력사업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와 같은 북·러간의 접촉 증가는 그동안 냉각되었던 양국관계가 복원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최근 효력을 상실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을 대체하기 위해 양국은 1차회담(1.21, 평양)에 이어 차관급 2차회담(6.16, 모스크바)을 가졌다. 북한은 새 조약에 러시아의 고려연방제 통일안 지지 문안의 삽입을 주장했으나 러시아가 이를 거부했다. 그러나 양측 대표단은 1차회담에서 합의한 상호주권 인정, 내정불간섭, 영토보존의 원칙, 상대방에 대한 무력불사용 등의 기본조항을 재확인했다. 따라서 양국간의 새로운 관계를 규정하는 조약은 과거와는 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러시아 외무부 관리는 1998년에 포괄적인 쌍무협력조약을 체결할 예정임을 시사(11.21)했다.

북·러 관계개선은 체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북한이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는 점에 기인한다. 그러나 양국의 관계개선에서 보다 중요한 요인은 러시아의 대북한 자세 변화이다. 그 동안 러시아는 경제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외교의 중심축을 남한으로 이전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지 않으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즉 러시아는 북한과의 관계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약화된 대북 영향력을 회복하는 동시에 남북한에 대한 등거리 외교를 통해서 자국의 실익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특히 러시아의 의도는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해서 최근 진전되고 있는 미·일의 대북한 접근으로 발생할 자국의 외교·안보적 이익의 축소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대북관계 개선 노력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확대가 결정된 1997년 중반 이후 점차 강화되었다. 프리마코프 외무장관은 한국방문(7.23~26)시 남북한과 균형적인 외교를 유지할 것이며, 어느 한 쪽과의 관계발전이 다른 쪽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가 진전되고 있으며, 양국이 상호협력 메커니즘을 복구하고 있다"고 함으로써 북·러관계가 최근 몇년간의 소강상태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시사했다.

북한으로서는 러시아와의 관계복원이 경제난 타개를 위한 외부지원의 확대와 한국에 대한 협상력 증대라는 측면에서 유용성이 있으며, 대미·일관계의 개선과정에서도 중요한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 러시아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 왔던 아·태지역에서 북한의 전략적 중요성을 점차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1998년에도 북·러관계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나 여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북한은 한반도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관여가 가져올 효과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체제전환 과정에 있는 러시아가 북한을 경제

적·군사적으로 원조하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경제관계때문에도 남한과의 관계악화를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3. 대남동향

1997년 북한은 대남적대 및 남한배제전략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였다. 전통적인 대남적화전략을 포기하지 않은 북한은 「로동신문」, 「평양방송」 등 제반 선전수단을 동원, 남한을 비난하였다. 북한은 신년 「공동사설」에서 '3대헌장' 제시(1.1)를 통해 김일성의 연방제통일론 관철을 1997년 대남정책 기조로 제시하는 반면, 김정일의 「8·4로작」을 통해 남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시사(8.4)함으로써 대남 2중정책을 구사하였다. 또한 북한은 대남적대 정책과 함께 식량지원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5.3; 5.26), 관제구역 재조정을 위한 「항공회담」(10.7~9)에 응함으로써 정경분리 또는 실리주의적 대남정책을 채택하였다. 1997년 북한이 취한 대남정책을 세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은 대남적화통일을 위해 계속 간첩을 남파했다. 1996년 잠수함사건을 일으켰던 북한은 부부간첩 최정남·강연정을 남파하고 고정간첩망을 유지하여 남한체제 전복을 기도하였다.

둘째, 「조선일보」의 김정일정권 퇴진 사설 및 KBS의 '진달래꽃 필 때까지' 드라마 제작에 대해 북한은 언론기관 폭파와 관계자 살해 위협 등의 강경한 반응을 보였다. 북한이 남한 언론기관에 대해 강경한 반응을 보인 이유는 소위 '신성모독'에 대한 강력한 응징전술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북한은 「남북적십자회담」과 「항공회담」 등에 응함으로써 경제적 실리 획득에 적극성을 보였다.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은 식량지원을 위한 남한의 「적십자회담」 개최 제의와 이에 따른 지

정기탁제를 수용, 약 2,000만 달러 상당의 물품을 획득하였다. 아울러 북한은 방콕에서 개최된 「항공회담」에 응하였는 바, 그 배경은 비용부담 및 주민접촉없이 연간 약 200만 달러 상당의 관제료 수입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넷째, 북한은 대남 상·하층 통일전선전술을 견지하였다. 북한은 상층 통일전선전술차원에서 「조선일보」 사태와 관련, 「민주조선」을 비롯한 각종 매체의 공동명의로 「동아일보」와 「서울신문」에 편지를 보내(7.14) 언론사간 이간을 시도하였고, 오익제 전 천도교 교령을 입북(8.15)시키기도 하였다. 한편 하층 통일전선전술 차원에서 한총련단결과 한총련탄압 중지를 요구하였다.

다섯째, 4자회담 제의('96.4.16) 이후 '검토중'임을 이유로 회담수용을 유보해 왔던 북한은 「4자회담」 1차 본회담에 참가(12.9~10)하였다. 북한이 4자회담 본회담을 수용한 이유는 한·미로부터의 대규모 식량지원 확보 및 미국과의 합법적 대화채널 유지 등에 대한 기대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1998년 북한의 대남정책은 지금까지와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남한당국에 대한 적대적 정책을 지속하면서 대북식량지원과 관련한 민간단체들과의 개별접촉을 강화함으로써 정부와 민간단체 사이를 이간시키려 할 것이다. 그리고 경제위기 하에서 실업문제 등으로 남한의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에 편승하여 남한사회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통일전선전술을 강화할 것이다. 특히 북한은 남한의 경제위기를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기회로 삼아 대남공세 및 대내 체제정당성 강화에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은 정경분리 차원에서 경제분야의 대화는 계속할 것이다. 임가공교역 확대 및 대북투자 유치를 위한 남한 기업인들의 방북에 대해서는 문호를 넓힐 것이며 경수로 건설사업을 위한 한국 근로

자의 방북 허용과 식량지원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Ⅲ. 남북한 관계

1. 남북대화

1997년에도 북한이 기존의 대남 반정부투쟁을 지속함으로써, 남북한간에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대결과 긴장이 계속되었다. 북한은 남한과의 당국간 대화를 지속적으로 거부했는 바, 이는 체제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남한과의 대화가 체제유지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과 한반도문제를 대미협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북한의 의도때문에 1997년에도 남북 당국간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비당국간에는 적십자회담 개최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 이는 남북관계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고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을 완화시키기 위한 대한적십자사(:이하 한적)의 주도로 성사되었다. 한적은 인도적 관점에서 대북 식량지원 절차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북적십자대표 접촉을 판문점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4.18)하였는 바, 북한적십자사(:이하 북적)은 즉각 동 제의를 수락(4.19)하면서 접촉장소를 북경으로 하자고 수정 제의하였다. 한적은 장소문제로 회담을 지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북적의 제의를 수락(4.30)하였다. 북경에서 남북적십자대표의 1차 접촉(5.3) 및 2차 접촉(5.26)을 통하여 민간차원의 대북 식량지원 규모와 절차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2차 접촉에서 한적은 북적과 민간차원의 식량지원 1차분 5만톤(옥수수 기준)을 제공하기로 합의했으며 3차 접촉(7.24)에서도 동일한 양의 지원을 약속했다.[1]

---

1) 자세한 지원 내역은 <표 7> 참조.

북경 적십자회담은 1995년의 북경 쌀회담 이래 처음으로 이루어진 남북간 직접대화였다. 또한 적십자회담으로서는 1992년 이산가족 노부모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을 위한 실무대표 접촉 결렬 이후 약 5년만이며, 남북 적십자회담에서의 합의는 1985년 이산가족의 상호방문 이래 12년만의 일이었다.

남한측은 적십자대표접촉에서 대북 직접지원의 의의를 강조하고 지원식량에 대한 분배의 투명성 확보에 역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한적표시와 지원단체·개인명의 표기, 기존상표 및 사용설명서 부착, 지정기탁제, 국제적십자사 요원의 분배과정 입회 등을 주장, 이를 관철시켰다. 북한이 1995년도의 대북 쌀지원시와는 달리 원산지 표기, 한적 요원의 인도·인수 장소 참관 등에 합의하였던 이유는 동 접촉이 결렬될 경우 남한 민간단체 및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분위기를 저해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측은 지원물량을 최대로 확보하되, 직접 지원의 의미를 최소화하기 위해 판문점 통과와 남한 기자들의 취재활동, 한적요원의 배급상황 참관에 대해서는 반대하였다. 또한 북한은 남한의 식량지원을 주민들에게 은폐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였다. 북한은 접촉사실과 합의서 채택사실을 「중앙통신」을 통해 간략히 발표하였으며, 심지어 남한이 국제사회의 인도적 대북 식량지원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6.13)하였다. 북한이 식량지원 1차분이 북한지역에 인도되는 시점(6.12)에 맞춰 이같이 비난한 것은 남한측 식량지원이 북한 내부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 정부수립 50주년이 되는 1998년 남한 신정부의 전향적인 대북정책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개선전망은 밝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998년 남북관계의 최대 이슈는 정상회담의 성사와 4자회담의 진전 여부이다. 남한 신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예견하고 있고, 김일성

사망으로 연기된 정상회담 합의가 김정일의 당총비서 공식승계로 유효하게 된 만큼 남북 정상회담이 핵심적 현안으로 부상할 것이다.

북한은 체제불안정으로 인하여 다자간 회담을 제외한 남북한 당국간 직접대화에는 쉽사리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남한의 신정부가 교류·협력에서 전향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북한이 신정부의 대북정책을 타진하기 위해 단기성 대화를 제의할 가능성은 있으나 전쟁위기와 긴장조성을 통하여 내부체제위기를 관리하고 있는 북한이 남북 당국간 대화의 정례화·제도화를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식량지원을 매개로 적십자회담을 통해 명맥을 유지했던 남북관계는 남한의 외환위기에 따른 대북지원의 어려움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다. 북한은 식량확보를 위해서 남한과의 관계개선보다는 미국 및 일본쪽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높아 기존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정책을 수정하여 남북관계 개선으로 정책을 선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1997년 두차례에 걸쳐 옥수수 10만톤 상당의 '대북지원에 합의했던 남북적십자회담은 계속될 것이다. 지원물자의 판문점 통과 및 분배과정에서의 한적요원의 입회문제를 둘러싸고 남북간의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북한의 식량난이 단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도적 차원의 적십자회담의 틀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2. 4자회담

한·미 양국은 제주도 정상회담('96.4.16)에서 한반도 평화보장을 위한 남북한·미국·중국간의 4자회담을 제안했다. 4자회담 제안 이후 북

한은 우리측 제의를 '검토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4자회담 수용여부에 대하여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회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96.5.7). 이에 한·미 양국은 북한측에 공동설명회 개최의사를 전달하였다('96.5.21). 한국정부는 1996년 8·15경축사를 통해 북한이 4자회담에 호응해 올 경우, '광범위한 긴장완화조치'의 일환으로 식량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협력 사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임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대남비방을 계속했으며, 급기야는 무장잠수함 침투사건을 야기('96.9.18)하여 남북한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 이에 한미정상은 마닐라 회담('96.11.24)을 통해 북한의 잠수함사건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북한은 잠수함 사건으로 인해 미국과의 관계진전이 벽에 부딪치게 되자, 외교부 성명을 통해 무력도발에 대해 유례없는 시인·사과를 하고('96.12.29), 미·북접촉을 통해 4자회담 공동설명회를 1997년 1월 29일 뉴욕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1.13).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대북식량지원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공동설명회를 2차례 연기한 후 3월 5일 뉴욕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했다. 뉴욕설명회에서 북한은 기본적으로 4자회담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선 대규모 식량지원을 요구했으며, 한·중관계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미·북관계의 균형적 발전과 주한미군 문제의 해결 및 4자회담 과정에 있어서 미국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함을 거론했다. 4월 4일 남북한과 미국은 뉴욕에서 참사관급 실무접촉을 가졌으며, 북한은 4월 16일 뉴욕에서 남북한과 미국이 참가하는 공동설명회 후속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의했다.

북한은 뉴욕 후속회의(4.16~21)에서 남북한과 미국이 먼저 4자회담 분위기 조성차원에서 협의를 진행시킨 다음 중국을 최종단계에 참여시킨다는 소위 「3+1」구도를 제시하면서 식량 150만톤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는 4자회담 준비단계에서 미국과 북한간 협의를 축으로 미·북간의 현안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남북한과 미국은 2차 후속회의를 개최하고(6.30), 남북한과 미국 및 중국의 차관보급이 참가하는 예비회담을 8월 5일 뉴욕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뉴욕에서 개최된 제1차 예비회담(8.5~8.7)과 제2차 예비회담(9.18~9.19)에서 북한은 주한미군철수와 미·북평화협정을 본회담에서 우선적으로 다룰 것과 본회담 이전에 대규모 식량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회담을 결렬시켰다.

남북한과 미국 및 중국은 뉴욕에서 실무접촉을 가졌으며(11.10), 북한은 2차 예비회담에서 한·미와 중국이 수정제의한 포괄적 단일의제안('한반도 평화와 신뢰구축 문제')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남북한과 미국 및 중국은 뉴욕 제3차 예비회담에서(11.21) 12월 9일 제네바 본회담을 개최할 것과 의제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긴장완화를 위한 제반문제'로 할 것에 합의했다.

북한은 제1차 본회담에서(12.9~10) 주한미군철수와 미·북평화협정 체결을 우선적 의제로 다룰 것과,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종전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한국측이 제안한 실무분과위 설치에 반대했다. 결국 제1차 본회담은 가시적 성과없이 1998년 3월 16일 제네바에서 제2차 본회담을 개최할 것과, 이에 앞서 1998년 2월 북경에서 실무회담을 가질 것에 대한 합의만 도출하고 막을 내렸다.

북한이 4자회담 본회담 개최에 합의한 것은 회담거부 명분의 상실, 대미관계 개선 및 대일 수교협상 재개 필요성 등에 기인한다. 비록 북한이 본회담 개최에 응해왔으나, 회담의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4자회담 제1차 본회담의 합의에 따라 1998년 2월 북경에서의 실무회담 개최에 이어 3월 제네바에서 제2차 본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4자회담을 통하여 식량지원을 확보하고자 기도하는 북한은 식량지원을 의제와 연계시키기 위하여 본회담을 사실상 예비회담화하거나 자신들이 의제로 제기한 주한미군문제와 미·북평화협정체결 문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견지하여 회담운영의 주도권을 장악하려 할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전략에도 불구하고 4자회담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매우 적극적이며, 중국도 이에 호응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올 하반기 중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3. 경수로사업

경수로사업은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핵심사업으로서 미·북간 제네바 기본합의문('94.10.21)에 바탕을 둔 것이다. 기본합의문은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북한에 경수로 건설을 지원하고, 미·북관계 개선에 동의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수로사업을 담당하기 위해 한·미·일이 설립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은 경수로 공급협정에 서명('95.12.15)하였다. 이후 양측은 1996년 4월부터 후속의정서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여 경수로사업의 기반이 되는 여섯가지 후속의정서에 서명하였다.[2] 이와 함께 KEDO와 북한은 구체적인 실무협상에서 시행세칙에 해당하는 19

2) 후속의정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KEDO의 법적 지위와 특권·면제 및 영사보호에 관한 의정서」, ② 「KEDO와 북한간의 통신의정서」, ③ 「KEDO와 북한간의 통행의정서」, ④ 「노무·물자·시설 및 기타 서비스에 관한 의정서」, ⑤ 「부지의 인수·접근 및 사용에 관한 의정서」, ⑥ 「채무불이행시 조치에 관한 의정서」.

개의 양해각서를 체결(7.2)함으로써 경수로 착공을 위한 법적·제도적 준비를 완료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무절차가 진행되었다. 남북한 우편물 교류업무가 시작(7.24)되었으며 금호지역에 KEDO 사무소가 개설(7.28)됨에 따라 분단이래 처음으로 한국외교관 2명이 북한에 상주하게 되었다. 경수로 건설현장과 한전본사를 연결하는 직통전화가 개설(8.4)되었고 금호지역에서 무궁화위성을 이용한 18개 케이블 채널의 수신이 가능(8.29)하게 되었다.

기본합의문 타결 이후 2년 10개월만에, 북한과 KEDO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포에서 부지준비공사 착공식이 거행(8.19)되었다. 한국 근로자가 김정일사진이 게재된 「로동신문」을 훼손한 사건(9.30)으로 공사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으나, 곧 재개되었으며,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외환은행 금호출장소의 업무가 개시(12.12)되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고 경수로사업이 「제네바 기본합의문」상의 다른 현안들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한·미·일 3국간에 합의해야 할 민감한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자문사(Technical Support Consultant: TSC)의 위상과 역할, 경수로 건설비용 분담 및 사업배분 문제, 한국의 경수로비용 확보 문제, 원자로 안전성에 대한 북한의 이의 제기 및 IAEA 특별사찰 거부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현재 신포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본공사를 위한 부지정지작업에 불과하며, 원자로건설이 시작되기까지 적어도 1년여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 본공사를 위해서는 부지준비공사 완료, KEDO와 한전간의 상업계약 체결, 한·미·일 3국간의 비용분담 합의, 북한의 본공사 착수승인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비용분담협상은 각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 민

감한 사안으로서, 각국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어내려 할 것이다. 비용분담협상이 타결되어도 국회의 동의와 같은 국내승인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하에서 국내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일 3국은 경수로사업이 북한의 핵개발 동결을 위해 불가피하다는데 공감하고 있으며, 북한 역시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고 있다. 따라서 대북 경수로 건설사업 속도에 완급이 있을 수 있으나, 사업 자체가 폐기되는 파국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수로사업이 본격적으로 개시되는 단계에서 참여국들간 이해대립이 초래될 수 있는 바, 특히 외화부족, 실업문제 등 경제적 어려움에 비추어 한국의 비용분담율을 둘러싸고 국내적으로 많은 논란이 일어날 것이다.

경수로 건설사업 진행과정에서 남북한 주민간의 광범위한 접촉 가능성은 높다. 2004년까지 경수로 2기 건설공사를 완공한다고 상정할 때, 연인원 약 1천만 명이 공사에 참여하게 되며, 하루 최대 7천여명이 공사에 동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신포지역을 서방 및 남한과의 대규모 경제협력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체제적응의 실험장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4. 교류·협력분야

가. 경제분야

1997년의 남북한 교역과 경제협력관계는 경제논리에 따라 순조롭게 증가·발전하는 양상을 띠었다. 1997년 1월부터 11월까지 남북한 교역 총액은 전년 동기대비 27.3%가 증가한 2억9천6백만 달러를 기

록하였다. 반입(1억8천3백만 달러)은 전년 동기대비 9.9% 증가했고, 반출(1억1천2백만 달러)은 71.8%나 증가했다. 이와 같이 반출규모가 급격히 신장된 이유는 잠수함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 남북한간에 특별한 정치적 갈등이 없는 가운데 KEDO의 중유지원과 한적을 통한 대북지원, 경수로 공사의 원만한 진행에 따른 물자반출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표 4> 년도별 남북교역 규모

(단위: 백만달러)

연 도	반 입	반 출	총 액	연 증가율(%)
1988	-	-	-	
1989	18.6	0.1	18.7	
1990	12.3	1.2	13.5	-27
1991	105.7	5.5	111.2	831
1992	162.9	10.6	173.5	56
1993	178.2	8.4	186.6	8
1994	176.3	18.2	194.5	4
1995*	222.9	64.4	287.3	48
1996	182.4	69.6	252.0	-12
1997.11**	183.2	112.3	295.6	27.3
('96.11)	(166.7)	(65.4)	(232.1)	

*: 대북 지원쌀을 제외한 수치
**: 11월말기준
자료: 통일원 교류협력국, 「남북교류협력동향」, 각년도.

위탁가공교역은 1992년 이후 급신장을 거듭해 1995년 4,589만 달러, 1996년에는 7,440만 달러를 기록하여 1995년 대비 62%의 신장세를 나타내었으나, 1997년에는 7,528만 달러(11월말기준)를 기록, 전년

에 비해 증가하였다. 1997년 위탁가공교역이 총교역에 차지하는 비중은 1996년의 29.5%에 비해 다소 하락한 25.4%를 기록하였다. 이는 대북지원중유의 반출(반출총액의 27.8%)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위탁가공교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1997년 11월말 기준으로 남북한 교역품목을 반입과 반출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반입품목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1차산품인 철강·금속제품 및 광산물 등으로 총 반입액의 약 50.9%를 점유했다. 그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위탁가공을 통해 반입된 섬유류 제품으로 반입총액의 24.8%를 점유했다. 반면, 반출품목으로는 위탁가공용 섬유원부자재가 총액의 34.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화학제품이 27.4%를 차지했다.

전반적으로 남북한의 물자교역은 남한이 원자재를 북한에서 들여오는 대신 반제품과 공업제품을 북한으로 반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남북교역이 남북한의 경제상황과 산업구조를 반영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5> 년도별 반입품목 구성

(단위: %)

연도	농수임산물	광산물	철강·금속	섬유류	화학제품	기타 공업제품	총 계
1989	3.1	5.9	80.8	7.0	-	3.2	100
1990	43.3	13.0	36.9	17.7	-	5.1	100
1991	7.2	6.3	81.4	1.5	1.6	2.0	100
1992	9.5	8.9	77.0	2.3	0.8	1.5	100
1993	5.9	0.8	86.6	5.0	0.4	1.3	100
1994	8.4	0.8	77.3	10.5	0.6	2.4	100
1995	9.2	1.3	74.3	13.0	-	2.2	100
1996	11.9	1.0	59.0	24.7	-	3.4	100
1997*	11.6	0.1	50.9	24.8	5.2	7.4	100

*: 11월말 기준

자료: 통일원 교류협력국, 「남북교류협력동향」, 각년도.

<표 6> 년도별 반출품목 구성

(단위: %)

연 도	농수 임산물	섬유류	기계·전자	화학제품	철강제	기타 공업제품	총 계
1989	-	100.0	-	-	-	-	-
1990	-	-	92.2	7.0	-	0.8	100
1991	29.0	0.5	8.1	62.5	-	-	100
1992	0.6	4.7	0.2	75.1	18.5	0.9	100
1993	0.1	74.5	5.5	13.0	0.5	6.6	100
1994	0.8	70.5	0.2	7.4	1.3	19.8	100
1995	1.3*	60.2	2.8	18.0	2.4	15.3	100
1996	4.5	60.9	4.8	21.0	0.1	8.6	100
1997**	6.9	34.3	4.2	27.4	0.5	26.7	100

*: 쌀지원 제외

**: 11월말 기준

자료: 통일원 교류협력국, 「교류협력동향」, 각년도.

1997년 남북한 경제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지적되어야 할 것은 대북 경제협력자 승인 건수가 크게 늘어난 점이다. 이는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 시행(1994.11.8) 이래 기업인 및 기술자의 방북을 비롯하여 위탁가공용 시설재 반출 및 시범적 차원의 경제협력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된 결과이다.

1997년 한해 동안(11월말 기준) 미홍식품, 신일피혁 및 아자커뮤니케이션 등 총 16개 기업들이 남북경제협력사업자로 승인되었다. 이로써 1992년 이후 협력사업자로 승인된 기업은 총 27개 사업자에 달한다. 특히 한국정부는 북한의 나진·선봉지대를 중심으로 한 제한적 개방조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토지공사와 대상물류에 협력사업자 승인을 하여 북한의 기간시설 개선을 위한 공단건설과 국제물류유통기지 건설을 추진하도록 했을 뿐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진출을 허용했다. 그러나 협력사업자에서 협력사업으로까지 승인을

받은 기업은 그리 많지 않았다. 협력사업으로 승인을 얻은 기업은 (주)대우를 비롯하여 태창, 한국전력, (주)녹십자, 한국통신, 한국외환은행 등이다.

1998년도 남북한간 교역규모는 1997년보다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위탁가공교역의 경우, 고임금과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한은 남북교역을 통해 경쟁력을 계속 확보할 수 있고,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북한으로서는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1998년 남북한간의 교역과 경제협력사업은 규모와 사업대상에서 질적으로 확대·발전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정치적으로 남한의 신정부 출범에 따라 대북 유화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고, 북한이 경제난 해소를 위해 4자회담 본회담의 진행 및 남북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1998년 남북경협과 교역은 확대 여지가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IMF 체제하에서 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기존의 투자계획도 재검토가 불가피함으로써 시장선점 방식의 접근이 아닌 수익성 평가에 따른 대북진출이 예상되는 바, 위탁가공을 제외한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의 확대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나. 사회문화분야

1989년 6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지침'이 발표된 이후 1997년 11월 말까지 사회문화교류는 경제교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같은 기간중 사회문화부문의 남북 교류·협력에서 분야별로 성사된 건수는 학술 112건(1,626명), 종교 59건(577명), 문화 41건(574명), 관광·교통 39건(110명), 과학·환경 32건(237명), 언론·출판 31건(104명), 체육 30건(93명) 등으로 학술, 종교분야에서의 교류가 중심

을 이루고 있다. 1997년의 경우(11월 31일 현재) 사회문화부문에서 남북한 주민접촉이 성사된 건수는 학술 13건, 종교 13건, 문화·예술 12건, 체육 9건, 관광·교통 9건, 과학·환경 8건, 언론·출판 4건 등으로 이와 같은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학술분야는 사회문화부문중에서도 비교적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학술교류는 대부분 중국 등 제3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중국의 연변대, 요녕대, 길림대, 북경대 등에 소속된 연구소와 오사까 경제법과대, 국제고려학회 등이 남북한 교류의 중개인 역할을 하고 있다. 시기별로는 7~8월에 집중되고 있으며, 점차 정례화·다양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7년 학술분야에서 성사된 주요 사안으로는 「남북학술회의」(북경, 6.30~7.1), 「제3회 고구려 국제학술대회」(동경, 7.20~21), 「제3차 남북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북경, 8.29~30), 「제7차 동북아 경제포럼」(몽골 울란바토르, 8.17~21) 등이 있었다. 특히 제4차 「세계청년학생평화세미나」(북경, 9.13~17)에는 남북한 대학생 200여명(북한학생 70여명)이 외국학생들과 함께 참석하여 한반도 통일에 관해 논의했다.

종교교류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식량지원문제와 북한동포에 대한 종교적인 관심에 힘입어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종교분야의 교류협력도 중국 등 대부분 제3국에서 이루어졌다. 종교분야의 주요 교류·협력사안은 다음과 같다. 「남북종교지도자베이징회의」(5.30~31)는 북한측의 제의로 이루어진 것이며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 주관으로 열렸다. 이 회의에서는 남북종교인의 협력강화, 식량지원 등이 논의되었다. 또한 김상학 대한예수교장로회 총무 등의 「세계개혁교회연맹총회」 참가(헝가리 드뷔르센, 8.6~20)가 있었으며, 지덕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공동회장 등이 금강산교회 복구 등 협의 목적으로(북경, 9.25~26) 북한측과 접촉했다. 남북한 왕래교류로는 김상진 성베네딕

트 수도원 신부 등이 북한을 방문(5.28~30)하여 나진지역 병원건립과 의료선교문제를 협의하고 나진병원 기공식에 참석했다. 또한 김동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등이 방북(9.23)하여 남북교회간 교류 및 협력방안에 관하여 북한측과 논의했다.

문화예술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은 북한측의 기피와, 상당한 준비와 비용이 소요되는 문화예술분야의 특성상 활성화되지 못했다. 또한 대부분의 교류·협력이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해외동포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특징을 보였다. 1997년 문화예술분야의 경우 「남북평화미술전」(동경, 10.28~11.1)에서 남북간의 접촉이 있었으며, 중앙일보 부설 통일문화연구소 권영빈 소장 일행은 문화유적 답사협의를 목적으로 방북(9.23)했다. 동연구소는 협력사업자 승인(12.10)을 받아 북한지역 문화유적을 국내에 소개하는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연구소는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 제정(6.27) 이후 최초의 문화협력사업자이다.

언론분야의 경우 비정치적 분야 프로그램 공동제작을 위해 협력사업이 추진중인데, MBC가 「금강산 자연다큐멘타리」 등 TV 프로그램 공동제작을 위한 협의 및 답사 목적으로 방북(10.25)한 바 있으며, KBS도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을 위해 접촉승인을 받은 상태이다.

체육분야의 경우 북한은 경제난을 이유로 국제적인 체육행사에 불참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교류·협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1997년의 경우 장봉완(대한산악연맹 상임이사) 등이 「북한등산협회 암벽등반교육 및 대회」를 참관(북경, 7.19~28)했으며, 선수단간에는 「세계탁구선수권대회」(영국 맨체스터, 4.24~5.5)에서 남북한 여자탁구선수단간의 접촉이 이루어졌다. 또한 주앙 아벨란제 국제축구연맹(FIFA)회장은 FIFA집행위원회(마르세이유, 12.3)에서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에 북한측의 참여를 요청하는 공식서한을 최용해 북한

축구협회회장에게 발송하였으며, 북한측이 참여를 희망할 경우 일부 경기가 북한에서 열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 따라서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와 관련 향후 실질적인 교류협력사업이 활성화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환경분야에서는 두만강개발계획(TRADP)과 관련한 환경워크샵이 블라디보스토크와 북경 등에서 개최되었다. 1차 워크샵(5.14~16, 블라디보스토크)에는 남북한·중국·러시아·몽골 등 TRADP 참여 5개국, UNDP 등 국제기구, 국제환경단체 및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TRADP의 환경사업에 대한 지구환경기금의 사용문제와 사업계획 등에 관해 논의했다. 2차 워크샵(10.6~7, 북경)에는 남북한을 비롯하여 중국·러시아·몽골, UNDP 등이 참가했으며, 북한에서는 박춘일 외교부 국제조직부 국제환경협력추진위원회 과장, 김대성 국토환경부 전문위원이 참가했다. 주요 성과로는 두만강유역의 생태환경 보호를 위한 전략사업계획(Strategic Action Plan: SAP)에 합의했다.

교통분야에서 남북한은 「대구-평양 비행정보구역 통과 국제항로 관련 남북한 당사자회의」(10.7~9)를 개최했다. 남한측에서는 김광재 건교부 국제항공담당관, 북한측에서는 계일남 민항총국 대외협력과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가하였다. 그 결과 비행정보구역 동시통과 항공노선을 개설했으며, 대구-평양간 항공관제 직통전화가 개통되었다.

정보통신부는 KEDO와 북한간의 합의에 따라 금호지구 경수로지원사업현장과 우편물교환을 시작(7.24)했다. 첫 우편물교환은 경수로사업과 관련 함경남도 금호지구에 파견된 박영철 한전 금호원자력건설본부장이 이종훈 한전사장에게 보낸 2통의 우편물이 도착함으로써 이루어졌다(8.18).

북한 당국은 사회문화분야의 교류를 기피하고 있지만, 최근 외화벌

이를 위한 방편으로 일부 선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1998년의 남북간 사회문화교류도 그 동안의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학술분야의 교류·협력은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말 컴퓨터처리 국제학술회의」와 「고구려 국제학술회의」는 앞으로 상당한 진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북한은 고구려 고분을 유네스코 이사국들의 결의를 거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남북간의 교류·협력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은 인도적 지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교분야의 교류·협력에도 긍정적으로 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1998년의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은 학술과 종교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 질 것이며, 기타 분야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5. 인도주의적 사안

가. 대북지원

정부는 북한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북한 식량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유도하며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한다는 기본입장에서 1997년에도 대북지원을 계속 추진해 왔다. 이같은 기본방침에 따라 한국은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에 동참하여 지난 2년 반동안('95. 6~'97.11.25) 「세계식량계획」(WFP),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유엔아동기금」(UNICEF), 「대한적십자사」 등을 통해 총 2억 8,676만 달러 상당의 대북지원을 실시하였다.

1997년에는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모두 4,675만 달러 상당의 구호물품을 지원하였다. 정부차원에서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2천

여만 달러를 포함하여 총 2,732만 달러 상당의 식량과 물품을 지원하였다. 이는 지난 4월 유엔 인도지원국의 대북 추가지원계획에 호응하여 정부가 북한에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8.23)한 1,000만 달러도 포함된다. 지원품목은 옥수수, 분유, 기타 혼합곡물 등이 주를 이루었고 120만 달러 상당의 수해복구장비도 지원(11.18)되었다.(<표 7> 참조).

한편 민간차원에서는 적십자사를 통한 직접적인 지원이 실시되었다. 대한적십자사는 식량 5만톤(옥수수 기준)씩을 2차에 걸쳐 지원하였다. 1차로 옥수수 4만1천톤을 비롯하여 밀가루, 라면, 비료 등을 전달하였고, 2차로 옥수수 1만7천톤 이외에 수수, 밀가루, 식용유, 감자, 분유, 영양제 등을 지원하였다. 따라서 1997년 국제적십자사를 경유한 지원을 제외하고 남북적십자사간 직접 접촉을 통해 총 1,943만 달러 상당을 구호물품을 지원하였다(<표 8> 참조).

정부는 북한이 4자회담 본회담에 참여할 경우, 정부차원의 식량지원을 논의할 수 있다는 방침을 견지하고 있으나, 1998년에는 경제사정의 악화로 인해 대규모 대북지원이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신정부의 전향적 대북정책에 따라 민간차원의 대북식량지원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4자회담 본회담 및 북·일 수교협상 진전 여부에 따라 미·일 등 주변국의 대북지원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유엔의 대북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고려할 때, 유엔 산하 국제기구 및 국제민간단체의 대북 식량지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표 7> 한국의 대북지원('95.6~'97.11.25)

(단위: 만 달러)

	지원시기	지원액수	경유기구	지 원 내 역
정부차원	1995	23,200		쌀 15만톤
	1996	200	WFP	혼합곡물
		100	UNICEF	분유
		5	WMO	기상자재
	1997	600	WFP	혼합곡물
		34	UNICEF	ORS공장비용
		1,048	WFP	옥수수, 분유
		1,000	WFP 등	옥수수, 분유, 복구장비 등
		50	IFRC	모니터 비용
	소계	26,237		
민간차원	'95.9~'97.5 (19회)	496 (396,915만원)	국제적십자	밀가루 3,664톤, 분유 94톤, 담요 1만 개, 식용유 18.6만 톤, 라면 10만 개, 양말 3만 5,000켤레, 감자 1,940톤, 옥수수 4,980톤, 봄무종자 4.8톤, 봄배추종자 6.4톤
	'97.6~7 (1차지원)	938 (757,100만원)	대한적십자	옥수수 4만 1,521톤, 밀가루 2,000톤, 라면 15만 상자, 비료 2,000톤
	'97.8~10 (2차지원)	1,005 (803,700만원)	대한적십자	옥수수 1만 7,082톤, 수수 1만 3,000톤, 밀가루 5,501톤, 식용유 27만ℓ, 분유 100톤, 어린이영양제(비타민) 3만 병
	소계	2,439		
총액		28,676		

* 지원예정량 포함.

<표 8> 국제사회의 대북지원('97.11.25 현재)

(단위: 만 달러)

	지원시기	지원액수	목표달성율	비 고
UN기구	'95.9~'96.6 (1차)	930	46%	미국 222.5, 일본 50, EU 38
	'96.7~'97.3 (2차)	4,169	97%	미국 717, 일본 600 한국 305, EU 860
	'97.4~'98.3 (3차)	14,270	78%	미국 5,700, 한국 2,682, EU 2,466, 일본 2,700
	계획외 지원	4,090		EU 4,053, 노르웨이 37
	소계	23,459		한국 2,982 포함
국제 적십자사	'95.10~'96.3 (1차)	349	84%	
	'96.4~'96.10 (2차)	443	77%	
	'96.11~'97.10 (3차)	1,080	100%	
	'97.7~'97.11 (4차)	200	11%	
	소계	2,072		한국 496 포함
개별국가 및 NGOs 직접지원		9,269		일본(95년 쌀 15만 톤 2,250) 중국(96년 12만 톤 3,054, 97년 7만 톤 1,600, 콩 2만 톤 876) 대만(97년 쌀 2,000톤 100)
		900		조총련
		3,650		Americares, 유진벨 등
총액		38,950		한국 3,478 포함

* 지원예정량 포함.

나. 이산가족문제

남한은 이산가족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북한측의 성의있는 노력을 촉구해 왔고, 이산가족 방문단의 정례 교환, 「이산가족 면회소」 및 「우편물교환소」 설치의 우선 추진을 북한측에 제의해 왔다. 그러나 북한은 이산가족의 상봉으로 인해 남한을 비롯한 외부세계의 실상이 알려지는 것을 우려하여 이를 기피하고 있다.

따라서 1997년 남북이산가족 접촉은 주로 남측 이산가족의 개별 노력에 의하여 일부 이루어졌다. 남측 이산가족들은 국내에 설치된 이산가족연락센터를 통해 개인적 접촉을 모색하거나, 중국·미국 등의 이산가족 상봉 주선센터를 통해 상봉이나 서신교환을 시도하여 왔다. 1997년 11월말 현재, 141가족이 재북가족의 생사를 확인하였으며, 644통의 서신교환이 이루어졌고, 55가족은 제3국에서 북한가족과 상봉하였다(<표 9> 참조). 1997년도에는 생사확인이나 서신교환이 1996년에 비해 크게 늘어났으며, 제3국을 통한 이산가족 상봉은 3배나 증가하였다.

<표 9> 제3국을 통한 이산가족 교류 연도별 성사 현황

연도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계
생사확인	35	127	132	221	135	104	96	141	991
서신교환	44	193	462	948	584	571	473	644	3,918
제3국 상봉	6	11	19	12	11	17	18	55	149

* 1997년은 11월말까지 통계임.

1998년에 북한은 대북 식량지원의 확대를 위하여 지정기탁제 등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이산가족문제에 대해 부분적인 태도 변화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대한적십자사는 북적에 이산가족면회소 설치를 위한 접촉을 제의(11.8)하였는 바, 북한이 대북지원과 연계하여 나진·선봉지역 등 통제된 지역내에 「이산가족 면회소」나 「우편물교환소」 설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대화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한편 남측 이산가족의 개별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바, 북한측은 개별적인 접촉을 유도하여 경제적인 실리를 챙기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 인권문제

북한의 인권상황은 경제난·식량난의 악화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공개처형과 정치범수용소에서의 인권유린이 계속되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그 동안 국제사회는 북한 식량난을 계기로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켜 왔다. 특히 1997년에는 UN 산하 기구 및 국제구호단체들이 북한을 방문하여 기아로 인한 북한주민들의 생존권 침해실상을 일부 확인하기도 하였다. 또한 국제사면위원회(Amnesty)가 북한의 공개처형에 대한 특별보고서를 발표(1.22)함으로써 북한내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처형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졌고 약 1,500명 정도로 파악되는 중국·러시아내 탈북자들의 인권보호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한국정부는 탈북자문제가 점차 국제적 관심사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7.14)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탈북주민들의 사회적응교육과 적응훈련이 시범적으로 실시되었으며, 「북한이탈주민후원회」도 결성(8.13)되었다. 또한 한국은 국제인권기구들의 자료와 탈북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A·B규약[3]의 기준에 의거, 「'97 북한인권백서」를 발간(5.16)하였다.

한편, 유엔 인권위원회 산하 「소수민 차별방지 및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Sub-Commission on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nd Protection of Minorities)는 북한주민들의 국내외 거주이전 자유를 보장하도록 촉구하면서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상황에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대북 결의안을 채택(8.21)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국제인권규약 탈퇴를 선언(8.27)하였으나 UN 인권이사회는 북한의 탈퇴 통보에 대해 국제법과 국제인권규약의 규정상 B규약에 대한 폐기·탈퇴의 권리가 용인되지 않는다는 공식입장을 채택(10.29)하고 이를 북한 및 UN 사무국에 통보(10.30)하였다.[4]

1998년 UN인권위 및 인권소위는 위의 결의안을 토대로 북한의 인권상황을 계속 거론하여 B규약 탈퇴 철회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가 체제유지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이를 차단·희석화하고 국제사회로 부터의 압력을 최소화하고자 출소공산주의자 송환을 요구하는 등 역공세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정부는 1998년 국제사회에 북한인권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이산가족·납북억류자 등 인도주의적 사안의 해결과 해외 탈북자들의 신변보호를 계속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간단체들은 인권위원회가 이른바 '1503절차'[5]의 가동을 위해 '이동의 자유' 등 북한인권문

3) 인권관련 국제규약은 90여개 이상으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이 대표적인 규약이다. 북한이 탈퇴를 선언(8.27)한 것은 B규약이다. 1976년 3월 23일 발효된 B규약은 주로 종교, 표현, 집회와 거주이전의 자유, 임의적인 체포와 억류금지, 생명권, 재판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남한은 1990년, 북한은 1981년에 가입했으며 1997년 현재 총가입국은 131개국이다.

4)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56조는 탈퇴를 규정하지 않은 조약에 대해 당사국이 당초 탈퇴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탈퇴 불가를 규정하고 있다.

5) '1503절차'는 '70.5.27 경제사회이사회가 결의 1503에 의해 인권소위에 대해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극심하고 믿을 만한 근거있는 위반의 지속적 관

제를 전담하는 '특별보고관'을 임명하도록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라. 납북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포로

1955년 이후 현재까지 납북자 중 미송환자는 442명에 이르고 있으나, 그 동안 납북억류자문제는 심도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1997년에는 최정남·강연정 부부 남파간첩사건에서 그간 파악되지 않았던 일부 납북억류자의 명단이 확인되었다. 이중에는 1970년대 후반 실종된 김영남·이명우·홍건표·최승민·이민교 등의 고교생이 납북억류자로 확인(11.21; 12.10)되면서 충격을 주었다. 납북자들 가운데 50여 명 이상이 「김정일정치군사대학」 등에서 남파간첩 교육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11.21).

한편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국군포로 문제는 1997년에도 거론되지 못하였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전을 거치면서 북한지역에 억류 또는 실종된 국군의 수는 1만 9,000여명에 달한다. 한국은 수차례에 걸쳐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국군포로의 송환을 요구하였으나 북한은 이를 계속 거부해 왔다. 국군포로 중 생존자들은 아직 억류 중에 있거나 요주의 인물로 분류되어 일정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북한 내에 국군포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대신 오히려 출소공산주의자들을 전쟁포로라고 강변하면서 이들의 송환을 주장해 왔다. 북한은 북한적십자사, 「남조선 비전향장기수 구원대책조선위원회」 명의로 대한적십자사, 유엔 인권위와 국제인권기구 및

행'에 관한 통보를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데서 유래한 것이다. 동 결의 제1항에 의해 인권소위는 UN 사무총장에게 접수된 인권침해 관련 통보와 이에 대한 관련국 정부의 답변을 심의할 권한을 갖는다.

단체 등에 이들의 북송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또한 북한은 미 대통령 부부 및 주요 인사에게 서한을 보내면서 이들의 송환 책임이 미국에게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한국이 서해상에 표류(8.25)하던 북한군 하사를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북한으로 송환(9.11)한 데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1998년에도 북한은 일부 납북억류자들의 기자회견 등을 통해 북한 내에 납북억류자가 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은 남한 내 출소공산주의자들의 송환을 더욱 강력하게 요구함으로써 북한내 국군포로문제와 대북 인권문제 제기를 희석화시키려 할 것이다.

한국은 부부간첩사건으로 밝혀진 납북억류자에 관한 자료와 가족들의 진정서를 UN 인권고등판무관실에 제출하는 등 국제기구를 통한 납북억류자 송환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남북대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 문제를 거론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4. 국제무대에서의 남북한 관계

1997년에도 남북한은 각종 국제회의나 국제기구 등에서 직·간접으로 접촉하여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반목하는 양상을 보였다.

제52차 유엔총회에서 북한은 대미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였다. 최수헌 북한 외교부 부부장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평화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미군을 철수시키고 우리와 미국과의 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조성 책임이 전적으로 한·미측에 있음을 국제사회에 선전하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은 제52차 유엔총회 제1위원회 「군축 및 국제안전문제」에 관한 대표 연설(10.22)에서도 반

복되었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한반도문제 해결의 실질적 당사자는 남북한임을 강조하고 북한에게 조속히 「4자회담」 개최에 응하도록 촉구하였다.

국제무대에서 남북한간 협력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남북한은 방콕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아·태지역 사무소에서 열린 제3차 「남북민항 실무자회의」(10.7~9)에서 평양 비행정보구역과 대구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는 국제항로의 설정 및 운용에 관한 합의서와 동의각서를 채택했다. 이 회의에서 관제용 직통통신망 구성방식에 대해 대구-평양 관제소간 관제통신망 주회선으로는 판문점 경유 유선전화를, 보조회선으로는 ASIASAT-2 인공위성을 이용한 통신망을 사용하며, 관제협정의 발효일을 1998년 2월 28일로 하기로 합의했다.[6] 이와 관련, 대구-평양간 항공관제 직통전화가 개통(11.19)되었다.

북한이 평양 비행정보구역 통과 항로 개설에 합의한 것은 개설예정 항로가 육지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동해 상공을 통과하게 되어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 요인이 없는 반면, 연간 200만 달러에 달하는 통항료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실리가 고려된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직통전화 개설은 대구 항로관제소와 평양 항로관제소간을 직접 연결하여 상시 사용하게 되는 남북한 최초의 통신망이라는 점에서 향후 남북한간 비정치적 분야의 교류·협력에 하나의 전환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제회의를 통한 남북한간 접촉은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과 관련한 제3차 5개국 위원회 회의에서도 이루어졌다. 이 회의는 남북

6) 대구-평양 비행정보구역(FIR: Flight Information Region) 통과 국제항로 개설문제는 이미 1996년에 남북한 및 일본, 중국 항공당국 대표가 참석한 당사국간 회의('96.9.10-13, 방콕)에서 논의된 바 있는데, 이 때는 대구-평양 관제소간 관제용 직통통신망 구성방식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했었다. 이로써 미주노선은 20~34분, 러시아노선은 47분 정도의 시간단축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며 동 노선을 운항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기 편수를 기준으로 할 때, 유류절약으로 인한 연간 비용절감액수도 1천4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 중국, 러시아, 몽골 등 5개 회원국 대표와 유엔개발계획(UNDP)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11.17~18, 북경)되어,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의 전반적인 발전방향과 재원조달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 회의에서 북한은 나진·선봉 지대 개발을 위한 재원마련에 관심을 보였다.

한국은 유엔을 통해 북한의 수해농지 복구를 위한 불도저 등 120만 달러 상당의 UNDP 표시 부착 국산 건설장비 19대를 제공(11.18)하였다. 이 지원은 한국정부가 1997년 4월 유엔 인도지원국의 대북 추가지원계획에 호응, 수해복구장비를 포함한 1천만 달러 상당의 구호물자를 북한에 추가 지원키로 한 결정(8.23)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1998년에도 남북한은 국제무대에서 다양한 차원의 접촉을 하게 될 것이다. 특히 1998년 북한의 식량사정은 전년도에 비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식량계획(WFP), 세계식량농업기구(FAO), 국제적십자연맹(IFRC) 등 국제구호단체를 통한 접촉은 계속될 것이다.

대미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 등 북한이 정치적 공세를 전개할 유엔에서는 격돌이 불가피할 것이지만 두만강지역개발계획 등 경제적 실리가 얽혀있는 국제회의에서는 제한된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동북아 국가간 최초의 「다자간 협력사업」인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은 역내 국가간 경제협력 증진 및 평화와 안정에 공헌할 것이며, 동 지역의 개발을 통한 남북한간의 교류·협력 및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동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이 사업의 중요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재원마련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1998년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부록>

1997년도 주요사건일지

1. 1 북한, 「당보, 군보, 청년보 공동사설」 발표
1.10 북한 외교부, 일본에 대해 전후문제 청산회담 촉구
1.13 미·북, 4자회담 공동설명회 뉴욕개최 합의
1.21 북·러,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 개정을 위한 1차회담 개최(북경)
1.22 국제사면위원회, 북한의 공개처형 실태 보고서 발표
1.24 북·러, 「여행협정」 체결
1.25 한·일, 정상회담 개최
1.29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지지 입장 천명
1.30 미 국무부, 「인권백서」 발간, 중국내 인권상황 비난
2.12 황장엽 북한 노동당 비서, 망명 신청
2.13 북한,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시도 비난
2.17 김정일, 중앙노동당 중앙위원회 청년일꾼과의 담화에서 개혁·개방 불가 천명
2.20 정부, 6백만 달러 대북 식량지원기금 제공 발표
2.23 미국,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
2.23 미국, 대일 통상마찰 경고
2.24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 중국방문(~25)
3. 1 미국, 북한에 대해 평양에 임시연락사무소 개설 의사 타진
3. 1 중국, 8기 5차 전인대 개최(~14)

3. 5 남북한·미국, 4자회담 공동설명회 개최(뉴욕)
3. 7 미·북, 4자회담 준고위급 회담 개최(뉴욕)
3. 8 김계관 북한 외교부 부부장, 워싱톤 방문(~13)
3.10 미국, 유엔인권위원회에 「중국 인권결의안」 상정
3.17 한국·세계식량계획(WFP), 대북 긴급식량지원 이해각서 조인
3.20 미·러, 헬싱키 정상회담에서 군축관련 4개 공동성명과 경제관련 1개 공동성명 채택
3.21 중국 군함, 미국 본토에 2차대전 이후 최초 기항(~25)
3.24 고어 미 부통령, 방중(~28)
3.27 미·중, 「상하이 자동차회사 합작의정서」 체결
3.29 중국, 일본에 역사인식 수정 촉구
3.29 이께다 일본 외상, 방중(~30)
3.31 정부, 민간차원의 대북 쌀지원 허용
4. 1 중국, 「인권백서」 발간
4. 4 미 국무성, 북한을 국제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4. 7 미 재무부, 민항기의 북한영공 통과 허용
4. 9 북한, 김정일 우상화 작업의 일환으로 '김정일 장군의 노래' 제정
4.12 중국, 주북한대사를 통해 총 7만여톤의 식량지원 의사 표명
4.12 러시아 브리야티아공화국 대통령, 방한(~18)
4.13 로디오노프 러시아 국방장관, 방중(~18)
4.14 북·러, 「과학기술협력 의정서」 교환
4.15 미국, 대북식량지원 계획 발표
4.16 로디오노프 러시아 국방장관, 한반도 전쟁시 개입 의사 천명
4.16 미·북, 4자회담 관련 후속회의 개최(~21)
4.20 북한, 4자회담을 「3+1회담」 형식으로 할 것을 제의
4.22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 러시아 방문(~26)

4.25 미·일, 정상회담 개최
4.25 중국, 「화학무기금지협약」 가입
4.28 첸치천(錢其琛) 중국 외교부장, 방미(~30)
4.30 북·러, 국회대표단 회담(모스크바)
5. 3 남북적십자사, 대북식량지원을 위한 1차회담 개최(북경)
5. 4 미·북, 미군유해발굴·송환협상 개최(뉴욕,~9)
5. 7 일본 신진당 소속 의원, 따오위따오(釣魚島) 상륙
5. 8 중국, 따오위따오 주권문제로 일본에 공식 항의
5.12 샬리카시빌리 미 합참의장, 방중(~16)
5.13 로디오노프 러시아 국방장관, 한반도 긴장고조 방지에 협력의사 표명
5.13 미·러, 군사협력협정 체결
5.14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 1차 환경워크샵 개최(블라디보스토크,~16)
5.16 「북한인권백서」 발간
5.16 로디오노프 러시아 국방장관, 방일(~18)
5.17 러시아, 북방영토내 러시아군 감축 약속
5.17 위용포(于永波) 중국군 총정치부 주임, 방러(~23)
5.19 일본, 동아시아지역 유사시 적극 대처 입장 재확인
5.24 일·러, 시베리아 목재 개발사업 재개 및 상호 출장소 개설 합의
5.26 남북적십자사, 대북식량지원을 위한 2차회담 개최(북경)
5.27 NATO·러시아, 기본협정 서명
5.30 남북종교지도자회의, 북경에서 개최(~31)
6. 1 북한, 나진·선봉자유무역지대내에서 일반화폐만 통용 실시
6. 4 한·미, 대북 식량원조와 북한의 4자회담 참가 연계 거부
6. 6 북·러, 국회회담 개최(평양)

6. 9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대북식량지원 지정기탁창구 개설
6.10 일본, 러시아 이르쿠츠크 가스전과 극동 삼림자원 개발 협력 약속
6.10 북한 친선대표단(단장: 인민무력부 부참모장 겸 전투훈련국장 이봉죽), 방중(~17)
6.11 일·러, 제2차 「경제공동위원회」 개최
6.11 미·북, 1단계 2차 미사일회담 개최(뉴욕,~13)
6.12 대한적십자사 대표단, 대북 지원곡물 직접 전달 개시(~19)
6.16 북·러,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 개정을 위한 차관급 2차회담 개최(모스크바)
6.17 북·중, 나진·선봉자유무역지대내 공동시장 개설
6.19 미·일, 정상회담 개최
6.20 G-8 정상회의 개최(~22)
6.20 옐친, 일본에 정상회담 정례화와 정상간 핫라인 설치 제의,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 지지의사 천명
6.26 체르노미르딘 러시아 총리, 방중(~28)
6.26 예브게니 아파나시예프, 신임 주한 러시아대사로 부임
6.26 한·일, 정상회담 개최
6.27 정부,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 제정
6.27 러시아 함정, 일본 요코하마항 기항
6.28 「북한어린이 살리기 의약품 지원본부」 출범
6.30 「남북학술회의」 개최(북경,~7.1)
6.30 미·북 4자회담 관련 후속협의(~7.2)
7. 1 중국, 홍콩주권 회복
7. 1 미·북, 1차 미군유해공동발굴작업 실시(~8.3)
7. 2 북한-KEDO, 경수로 사업 관련, 19개 양해각서 체결
7. 8 한·러, 제1차 「경제공동위원회」 개최

7. 9 북한, 「주체의 연호」와 「태양절」 제정
7.10 미국, 한국산 컬러 TV에 반덤핑조치
7.14 류싼짜이(劉山在)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부부장 평양방문시 8만톤의 식량 지원 약속
7.14 한국, 일본에 한국어선 나포행위 재발방지 촉구
7.1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효
7.16 북한군 비무장지대내 월경 침투사건 발생
7.17 미 상원, 북한 정전협정 위반시 미국의 대북 경수로지원 중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외원조법 수정안 통과
7.20 「제3회 고구려 국제학술대회」 개최(동경,~21)
7.23 프리마코프 러시아 외무장관, 방한(~26)
7.24 남북적십자사, 민간차원의 대북식량지원 2차분 5만톤 제공 합의
7.24 금호지구 경수로지원사업현장과 우편물교환 개시
7.25 하시모토 일본총리, 대러 외교3원칙 제시
7.26 미·중, 한반도 4자회담 성사를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
7.28 금호지구에 KEDO 사무실 개설
7.28 중국, 북한 공작원 이경춘 북한으로 송환
8. 1 중국, 한국 선교사의 중국내 불법 선교활동 시정 촉구
8. 4 북한 고려민항, 평양-블라디보스토크간 운항 개시
8. 4 금호지구 경수로 건설현장과 한전본사간 직통전화 개설
8. 5 남북한·미국, 4자회담 1차 예비회담 개최(뉴욕,~7)
8.10 푸쳰요우(傅全有) 중국군 총참모장, 방미(~13)
8.13 북한이탈주민후원회(이사장 강성모) 공식 발족
8.15 오익제 전 천도교 교령 밀입북
8.17 카지야마 일본 관방장관, 일본주변 유사범위에 대만해협이 포함된다는 입장 천명

8.17 「제7차 동북아 경제 포럼」 개최(몽골 울란바토르,~21)
8.19 경수로 부지준비공사 착공식
8.21 유엔 인권소위, 북한인권문제 관련 「대북인권개선결의안」 채택
8.21 북·일 수교협상 재개를 위한 심의관급 예비회담 개최(북경,~22)
8.22 북한, 북송 일본인 처의 고향방문 허용 입장 천명
8.23 정부, 대북 1천만 달러 추가지원 결정
8.23 류화칭(劉華淸)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 부주석, 방러(~28)
8.23 미·북, 2차 미군유해 공동발굴 작업 실시(~9.11)
8.26 장승길 이집트주재대사, 미국망명
8.26 한·중, 중국의 WTO 가입 협상 타결
8.27 북한, 국제인권규약(B규약) 탈퇴 선언
8.29 무궁화위성 이용 금호지구내 케이블TV 수신 개시
8.29 「제3차 남북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 개최(북경,~30)
8.31 미 카터재단, 북한 노동당 농업위원회 고위 간부 및 학자 초청 농업기술세미나 개최(조지아대학, ~9.8)
9. 4 하시모토 일본총리, 방중(~7)
9. 4 일·중, 물자무역부문 협상 타결
9. 6 북·일, 양국적십자사 연락협의회 1차회의 개최, 북송 일본인 처 고향방문 합의(북경,~9)
9.10 Americares, 대북지원 의약품을 미국 민간항공기로 공수
9.10 중국, 「핵수출통제조례」 제정
9.11 정부, 서해안 표류중 구조된 북한군 하사 송환
9.12 북한, 정부 비망록 형식으로 한국의 방위비 증액과 무기구매 비난 및 주한미군 철수 주장
9.12 중국, 15차 당대회 개최(~18)
9.13 「세계청년학생평화세미나」 개최(북경,~17)

9.16 북·러, 경제교류를 구소련시기 수준으로 회복시키기로 합의
9.17 미국, 미국내 북한 자산 동결해제를 위한 조사 착수 결정
9.18 남북한·미국, 4자회담 2차 예비회담 개최(뉴욕,~19)
9.18 한·미, 「대인지뢰금지협약」 가입 거부
9.19 한·일, 외무부 아주국장회의 개최
9.21 북한 평안남도 당대회 개최, 김정일을 총비서로 추대하는 결정서 채택
9.23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9.23 미·러, 러시아내 플루토늄 생산 원자로를 2000년부터 민수용으로 전환하기로 합의
9.23 중앙일보 북한문화유적답사 취재팀, 방북
9.24 정부, 일본에 「한·일 유사시협의체」 구성 제의
9.25 러시아, 일본에 일본자위대의 투명성 요구
9.26 북·러, 「이중과세 방지협정」 체결
9.26 미·러, 장거리핵미사일 감축시한 2007년말까지 연장
9.30 「로동신문」 훼손 사건
10. 1 미국, 한국산 자동차를 수퍼 301조 감시대상으로 지정
10. 1 중국, 관세율 17%로 인하
10. 2 한국,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
10. 4 북한, 향후 북한 노선이 과거와 차이가 없을 것임을 천명
10. 4 3차 미군유해 공동발굴 작업 실시(~23)
10. 5 요한슨 미해군 작전부장, 방중(~9)
10. 6 두만강개발계획(TRADP) 관련 2차 워크샵 개최(북경,~7)
10. 7 미·중, 「통상공동위원회」 개최
10. 7 대구-평양 비행정보구역 통과 국제항로 관련 남북한 당사자회의 개최(~9)

10. 8 김정일 당총비서 추대
10. 8 류화츄(劉華秋) 중국 국무원 외사판공실 주임, 방미(~10)
10. 9 일본, 2,700만 달러 상당의 대북 식량지원 결정
10. 9 중국, 유엔 인권전문가에게 중국내 정치범과의 사적 대화 허용
10.17 북한, 대성동 주민 2명 납치
10.22 정부, 일본에 유사시 사전협의 요구
10.23 미·일, 「안보협의회」 개최
10.24 문화방송, TV프로그램 공동제작을 위해 방북
10.25 중국, 외교부 대표단 북한 파견, 쟝쩌민 주석 방미시 논의사항 사전 통보
10.26 쟝쩌민 중국 국가주석, 방미(~11.3)
10.27 중국,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가입
10.28 남북평화미술전 개최(동경,~11.1)
10.29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의 국제인권규약 탈퇴 불인정 입장 채택
10.30 러시아 외무부, 최덕근 블라디보스토크 영사 살해사건 수사결과 발표
10.31 미국, 티벳문제 담당 특별조정관 임명
11. 1 일·러, 2000년까지 평화조약 체결 약속
11. 6 미국, 「종교박해제재법안」과 「강제임신중절제재법안」 통과, 중국에 인권개선 촉구
11. 8 대한적십자사, 북적에 이산가족면회소 설치 위한 접촉 제의
11. 8 북송 일본인 처 고향방문단 1진 15명 고향방문(~14)
11. 9 옐친 러시아 대통령, 방중(~11)
11.10 남북한·미·중, 4자회담 관련 실무접촉(뉴욕)
11.10 미국, 동두천 미군 훈련장 6백6만평 한국에 반환 결정
11.10 중·러, 「동부국경선획정조약」 체결

11.11 일·중, 「어업협정」 체결
11.11 한국 국회, 일본정부에 위안부문제에 대한 공개 사과 요구
11.11 리펑(李鵬) 중국 총리, 방일(~16)
11.11 일·중, 서비스무역부문 협상 타결
11.11 일·중, 「발전자금협력의향서」 체결
11.11 일본 여 3당대표단 방북(~14)
11.12 일본, 중국에 미·일·중·러 4개국 「평화회의」 개최안 제의
11.13 일·중, 「환경협력협정」 체결
11.14 하시모토 일본총리, 대북관계 개선 적극추진 의사 표명
11.16 중국, 웨이징성(魏京生) 석방
11.17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 관련, 3차워크샵 개최(북경,~18)
11.18 정부, 120만 달러 상당의 대북 수해복구 장비 WFP를 통해 지원
11.20 한·러, 「군수 및 군사기술협력협정」 체결
11.21 남북한·미·중, 4자회담 3차 예비회담 개최(뉴욕,~22)
11.21 정부, IMF에 긴급 자금지원 요청
11.24 북한, 국제농업개발기금 주최 세미나에서 4개항의 농업개혁안 발표(베트남 하노이)
11.25 클린턴 미국 대통령, 일본에 시장개방 확대 요구
11.28 정부, 일본에 200억달러 지원 요청
11.30 숑꽝지에(熊光楷) 중국군 부총참모장, 방일(~12.2)
12. 2 「동북아협력대화」(NEACD), 제7차회의 개최(일본,~4)
12. 9 4자회담 본회담 개최(제네바,~10)
12. 9 러시아, 4자회담 참여 요구
12.11 미·중, 차관급 「국방협의회」 개최(~12)
12.12 외환은행 금호출장소 업무개시
12.14 ASEAN정상회담, 콸라룸푸르에서 개최

12.19 김대중 대통령 당선
12.29 중·러, 장쑤성(江蘇省) 원전 공동건설계약 체결
12.30 일·러, 어업협상 타결
12.30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과 국교정상화 공동성명 발표

最近 發刊資料 案內

■ 연구보고서

96-01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최진욱 著 6,000원

96-02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
이우영 著 6,000원

96-03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
김학성 著 6,500원

96-04 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
황병덕 著 6,000원

96-05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다자적·양자적 접근
손기웅 著 7,000원

96-06 북한과 주변4국의 군사관계
鄭永泰 著 6,000원

96-07 韓·美 安保協力 增進方案 硏究
金國新 著 4,000원

96-08 東北亞 平和體制 造成方案
余仁坤
金永椿
申相振외共著 10,000원

96-09 北韓 經濟改革의 最適方向 硏究
吳承烈 著 6,500원

96-10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조 민 著 5,000원

96-1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著 5,000원

96-13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재성호 著 5,500원

96-14 북한 사회의 계급갈등 연구
서재진 著 7,500원

96-15 통일과정에서의 정당역할 연구
김도태 著 4,500원

96-16 KEDO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 협력이론을 중심으로
전성훈 著 5,000원

96-17 남북한 에너지분야 협력방안 연구
박순성 著 4,000원

96-18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박종철
김영윤
이우영 共著 7,000원

96-19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허문영 著 5,500원

96-20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한 관계
김규륜 著 3,500원

96-21 북한의 노동정책과 노동력 평가
남궁영 著 6,000원

96-22 한·러 안보협력 방안 연구
강원식 著 8,500원

96-23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김성철
정영태
오승렬외共著 8,500원

96-24 북한체제의 변화주도세력 연구
이교덕 著 4,500원

96-25 북한의 농업정책과 식량문제 연구
최수영 著 4,000원

96-26 북·미관계 개선과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전망
이헌경 著 6,500원

96-27 한·일 안보협력방안 연구
전동진 著 4,500원

96-28 북한의 유일체제와 정책경쟁
안인해 著 5,500원

96-29 韓·中 安保協力方案 硏究
崔春欽 著 3,500원

97-01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
강원식 著 5,000원

97-02 북·일수교와 남북한 관계
이교덕 著 3,500원

97-03 경수로인력의 북한체류시 법적 문제
제성호 著 7,000원

97-04 中·北關係 전망: 미·북관계와 관련하여
신상진 著 4,000원

97-05 북한 환경개선 지원 방안: 농업분야 및 에너지효율성 개선 관련
손기웅 著 5,000원

97-06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주변4국의 입장 분석: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박영호
배정호
신상진
조한범외共著 5,500원

97-07 통일한국의 위상
옥태환
김수암 共著 6,000원

97-08 북한 간부정책의 지속과 변화
김성철 著 4,500원

97-09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체제개혁 비교연구
조한범 著 4,500원

97-10 김정일 정권의 안보딜레마와 대미·대남정책
홍용표 著 4,000원

97-11 북한의 지방행정체계: 중앙·지방관계 및 당·정관계를 중심으로
최진욱 著 5,000원

97-12 북한인권문제와 국제협력
김병로 著 6,000원

97-13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인도적 지원사례
이금순 著 6,000원

97-14 미국의 대북한 경제정책: 현황과 전망
김규륜 著 4,000원

97-15 통일교육 개선방안 연구
황병덕 著 발간예정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1996
옥태환
전현준
제성호외共著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6
옥태환
전현준
제성호외共著 10,000원

북한인권백서 1997
김병로
송정호 共著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7
김병로
송정호 共著 $11.95

■ 연례정세보고서

96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6~1997	6,000원
97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7~1998	5,000원

■ 학술회의 총서

96-01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7,000원
96-02	脫冷戰期 韓半島의 戰爭과 平和	9,000원
96-03	북한경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전망	9,000원
96-04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7,500원
96-05	南北韓關係 現況 및 '97年 情勢 展望	7,000원
96-06	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전망	8,500원
97-01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	6,500원
97-02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7,500원
97-03	한반도 통일을 향하여: 정책과 국제환경	7,000원
97-04	남북한 사회통합: 비교사회론적 접근	8,500원
97-05	한반도 급변사태와 국제법	4,000원
97-06	북한 경제난의 현황과 전망	7,500원

■ 통일문화시리즈

96-01	統一과 北韓 社會文化(上)	10,000원
96-02	統一과 北韓 社會文化(下)	9,500원
97	바람직한 통일문화	9,500원

■ 논총

統一硏究論叢, 제5권 1호 (1996. 6) 10,000원
統一硏究論叢, 제5권 2호 (1996.12) 10,000원
統一硏究論叢, 제6권 1호 (1997. 7) 10,000원
統一硏究論叢, 제6권 2호 (1997.12) 10,000원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5 (1996) 6,500원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6 (1997) 9,000원

■ **Translation Series**

97-01 NORTH KOREA IN CRISIS: An Assessment of Regime Sustainability 7,000원
97-02 The Making of a Unified Korea: Policies, Positions, and Proposals 발간예정

민족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민족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보고서, 국문 및 영문 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1) 일반회원 :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2) 학생회원 : 대학 및 대학원생
   3) 기관회원 :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1) 가입방법 :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2) 연 회 비 :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일반회원은 10만원, 학생회원은 7만원, 기관회원은 15만원
   3) 납부방법 :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민족통일연구원)
   4) 재 가 입 :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
      (재가입 안내장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통일연구논총」과 *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보고서(년평균 25~30권), 학술회의 총서(년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년평균 10~15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 : 142-076)
   민족통일연구원 정보자료실(전화: 901-2613, 901-2604, FAX: 901-2547)

회원가입신청서

성 명				
근 무 처				
	직 위			
간행물 받을 주소	(우편번호 :)			
연 락 처	전 화		FAX	
	전자메일			
전공 및 관심분야				
회원구분	일반회원( ) 학생회원( ) 기관회원( )			

본인은 민족통일연구원의 정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199 년 월 일

신청인 (인)

※ 본 신청서를 入金證과 함께 FAX나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민족통일연구원 정보자료실 FAX: 901-2547)

※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 (예금주: 민족통일연구원)

※ 본 연구원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어떤 서비스를 더 제공했으면 좋은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본 신청서 뒷면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